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와 피후견국의 안보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외교학 전공
진교

#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와 피후견국의 안보

지도교수 조 동 준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진교

진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신 욱 희

부위원장 박 종 희

위 원 조 동 준

# 초록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 방법과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냉전기부터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안보도 자국의 국가이익으로 간주하여 핵무기 배치, 군대 주둔, 동맹 형성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적대 세력의 위협이나 공격을 확장억제하도록 하였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된 오늘 국제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세력 범위를 전 세계에서 축소시키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후견국이 피후견국에서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했을 때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확장억제 효과를 약화시킴으로써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가?”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을 동맹조약, 핵무기, 주둔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선정한다. 또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으로부터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한다. 첫째, 동맹조약이 종료된다면 과거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 데이터와 군사적 충돌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방법과 한국 사례를 통해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통계 분석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별로 가설을 검증한다. 통계분석에서 다른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확인되었다. 통계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을 일부분만 지지한다. 첫째, 공수동맹이 있을 경우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되거나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한편 동맹국과의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이 종료된다

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일반 확장억제에 있어 동맹조약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했을 때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진다. 한편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셋째,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방위동맹체제, 그리고 핵무기 철수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한 결과 통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1948-49년 미군의 완전 철수는 결코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반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 미군 감축은 한국의 안보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다. 주한미군 3차 철수의 경우 1970년 닉슨 독트린에 의거해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하였고 2사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북한이 공격할 때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다. 당시 미군 철수는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 개입을 피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국이 겪은 군사충돌이나 북한이 시도한 도발행위를 보면 한국의 안보상황이 3차 철수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이는 주한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확장억제 효과를 검증해준다.

본 연구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세력 범위를 전 세계에서 축소시키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하는 조건을 가늠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요어: 확장억제, 피후견국 안보, 동맹조약, 핵무기, 미군
학번: 2018-24444

#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 3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 5
제 1 절 동맹의 억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 5
제 2 절 해외 배치 핵무기의 억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 7
제 3 절 해외 배치 미군의 억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 11
제 3 장 연구 설계 ····· 16
제 1 절 연구 대상 ····· 16
제 2 절 연구 방법 ····· 25
제 3 절 가설 설정 ····· 26
제 4 장 실증분석 ····· 30
제 1 절 데이터 및 변수 설정 ····· 30
1. 분석 단위 및 데이터 ····· 30
2. 종속변수 ····· 31
3. 독립변수 ····· 31
4. 통제변수 ····· 35
제 2 절 분석 모형 ····· 40
제 3 절 분석 결과 ····· 40
제 5 장 사례 연구 ····· 57
제 1 절 사례 선정의 이유 ····· 59
제 2 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 ····· 61
제 3 절 핵무기 철수와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 ····· 70
제 6 장 결론 ····· 74
참고문헌 ····· 77
부록 ····· 89
Abstract ····· 101

# 표 목차

<표 III-1> 1950-2000년간 핵무기 해외 배치 상황 ····· 21
<표 III-2> 1950-2000년간 미군 해외 주둔 상황 ····· 89
<표 Ⅳ-1> 독립변수의 통계값 ····· 35
<표 Ⅳ-2> 핵무기와 동맹조약 관련 로짓 분석 결과 ····· 42
<표 V-3> 미군 감축에 관한 로짓 분석 결과 ····· 53

# 그림 목차

<그림 III-1> 1950-2000년간 동맹조약 변화 상황 ····· 20
<그림 III-2> 1950-2000년간 미군 해외 주둔 상황 ····· 23
<그림 III-3>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따른 연쇄적 과정 ····· 28
<그림 Ⅳ-1> 1950-2000년간 핵무기 해외 배치 상황 ····· 41
<그림 V-1> 1950-2000년간 주한미군 변화 ····· 58
<그림 V-2> 1965-1976년간 북한 도발 행위 빈도 ····· 67
<그림 V-3> 1965-1976년간 한국 군사충돌 발생 빈도 ····· 68
<그림 V-4> 1986-1996년간 한국 군사충돌 발생 빈도 ····· 72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 제기

냉전 시기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에서 상당한 규모의 군사기지를 세워 군대를 주둔시켰다. 또한 핵무기 배치나 재래식 무기 매매도 흔한 일이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뿐 아니라 방위동맹과 같은 군사협정이 또한 많았다. 이를 통해 강대국들은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안보도 자국의 국가이익으로 간주하여 적대국의 공격을 확장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1)]

그러나 확장억제의 효과는 쉽사리 달성되지 못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후견국이 핵보유국인지 혹은 비핵보유국인지의 여부에 따라 확장억제의 효과가 달라진다. 핵보유국의 경우 굳이 후견국이 무기 배치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맹약속을 통해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비핵보유국의 경우 동맹약속만으로는 군사적 분쟁 가능성의 효과적인 억제가 불가능하다[2)]. 즉 후견국이 피후견국의 위기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능력과 의

1) 미 국방부는 '억제'를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US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Joint Publication 1-02 (Washington, DC: DoD , 2011) , p.107) 확장억제는 억제의 범위가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적대국이 동맹국 혹은 우방국을 공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며 동시에 결코 적대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후견국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과 위기 시에 공격 대상인 피후견국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의지를 피후견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Huth, Paul K. 1990. "The Extended Deterrent Value of Nuclear Weapon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4.2 (1990): 270-90. p272)

2) Fuhrmann, M. and T. S. Sechser. 2014.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지를 확신시키는 과정에서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은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핵보유국은 피후견국에 배치된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하더라도 확장억제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예컨대 미국은 아무 부담 없이 핵무기를 유럽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후견국이 피후견국에서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했을 때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확장억제 효과가 약화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후견국이 핵보유국인지 혹은 비핵보유국인지 여부에 따라 확장억제 효과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인가? 즉 핵보유국은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하더라도 위기 시 피후견국을 보호하겠다는 능력과 의지를 피후견국과 적대국에 확인시킬 수 있는 반면 비핵보유국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오히려 후견국의 핵보유 여부보다는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의 차이가 핵심변수인 것은 아닐까? 후견국이 확장억제를 위해 피후견국에 배치한 여러 가지 군사적 자산은 실제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방위동맹을 이미 맺고 있는 상황에서 피후견국에 핵무기 배치를 통해 확장억제 효과를 높여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일 수는 없다.[3] 그렇다면 확장억제에 있어 방위동맹과 핵무기 배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가?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 차이에 주목하여, 다른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따라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동맹조약 맺음, 군사기지 건설, 핵무기 배치, 군대 파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조약, 핵무기, 주둔군 이 세 가지 확장억제 자산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의 확장억제 자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술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를 동맹조약 종료, 핵철수, 주둔군 감축 세 가지 항

---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919-935. p932.

3) Fuhrmann and Sechser, 2014, p920

목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확장억제 자산과 피후견국의 안보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세 가지 부분을 통해 검토한다. 특히 여러 연구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 설계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다. 먼저, 연구대상과 연구시기를 제시하여 연구의 범위를 정한다. 다음으로 억제이론, 확장억제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통계 방법을 이용한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 방법에서 선정된 사례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를 구체적인 지표로 조작화한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이다. 핵심 독립변수는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이다. 통제변수는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monadic attributes), 피후견국과 잠재적 공격국 간의 양자적 특성(dyadic attributes), 그리고 국제 체제적 특성 (international systemic attributes)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항 로짓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한다.

5장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 사례를 분석한다. 주한미군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핵무기 철수,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상황에 있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량적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다른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한

국의 안보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 과정을 요약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의 함의와 향후 가능한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확장억제 효과는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에 따라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다르다. 본 장에서는 동맹조약과 핵무기, 주둔군 이 세 가지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선행연구를 검토를 통해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 제 1 절 동맹의 억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확장억제에 관한 동맹조약의 효과 연구는 주로 동맹이 전쟁 혹은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잠재적 공격국은 피후견국에 대한 후견국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의 동맹국 구두 약속은 더욱 그렇다. 그 국가로 하여금 해당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상위의 권위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맹조약이 공개적으로 체결된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공식적인 동맹조약을 맺을 경우 후견국은 쉽게 동맹조약을 어기지 못한다. 후견국의 명성(reputation)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피후견국에 대한 후견국 동맹약속의 신뢰성은 다른 피후견국 위기 시 후견국이 취할 행동으로 예측할 수 있다. 후견국이 피후견국과의 동맹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후견국과의 동맹조약의 신뢰성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을 가져온다. 때문에 후견국의 명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위협에 빠질 때 동맹국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4)]

---

4) Paul K. Huth. 1988. Extended Deterrence and the Outbreak of Wa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Jun., 1988, Vol. 82, No. 2 (Jun., 1988), pp. 423-443. p429.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국가가 동맹조약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따라서 잠재적 공격국은 동맹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후견국에 따라 달라진다고 인식한다. 신뢰성이 높은 동맹국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피후견국에게 위협이나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후견국의 동맹국이 동맹조약을 지킬 신뢰성이 낮은 경우 동맹조약은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없고 결코 피후견국이 적대국에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5)]

실증연구에서 허스(Huth)는 긴급 확장억제에 있어 군사동맹과 군사협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한다.[6)] 아무리 강대국이더라도 짧은 시일 내에 타국에 군사력을 대규모 투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견국은 보다 긴 기간에 걸쳐 상당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피후견국에 투입한다. 긴급 확장억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병력을 분쟁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위기 발생 시 동맹조약만으로는 효과적인 확정억제를 제공하기 어렵다. 후견국이 강대국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반면 일반 확장억제에 있어 피후견국이 방위동맹을 가질 때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확인되었다. 리즈(Leeds)는 서면으로 작성된 동맹조약의 내용에 따라 동맹을 방위동맹, 공격동맹, 중립동맹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 중에서 방위동맹이 전쟁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7)] 그러나 모든 방위동맹이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국이 핵보유국인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핵보유국과의 방위 조약은 무기 배치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호가 없더라도 잠재적 공격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반면 비핵

---

많다. Leeds, Long, and Mitchell (2009)의 연구에 따라 25%의 동맹국이 방위동맹조약을 지키지 않는다. Siverson and King (1980)의 연구는 더욱 소극적인 통계결과가 나타났고 75%의 경우 국가는 동맹국을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명성에 의한 동맹조약에 대한 구속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다.

5) Smith, A. 1996. To Intervene or Not to Intervene: A Biased Decis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0(1), 16-40. pp18-19.

6) Huth, Paul and Russett, Bruce. 1988. Deterrence Failure and Crisis Esca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1), 29-45.

7) Leeds, B. 2003. Do Alliances Deter Aggression? The Influence of Military Alliances on the Initiation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3), 427-439. p932.

보유국과의 방위 조약은 그러한 효과를 받을 수 없다. 선행연구에 따라 동맹조약은 보편적으로 잠재적 공격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동맹국의 핵보유 여부에 크게 달려있다. 동맹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잠재적 공격국은 후견국이 핵무기를 사용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후견국을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이처럼 동맹국이 핵보유국일 경우 군사충돌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8] 반면 동맹국이 비핵보유국일 경우 동맹조약이 잠재적 공격국에 대한 억제력은 상당히 제한된다.

본 연구는 동맹조약의 종료가 확장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맹조약의 종료가 확장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동맹조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동맹국에 대한 의무에 따라 동맹조약은 방위 조약, 공격 조약,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협상조약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9] 그 중에서 방위 조약과 공격 조약은 위기 시 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에 위협이나 공격을 가하고자 할 때 후견국의 개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방위 조약, 혹은 공격 조약은 잠재적 공격국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을 가져온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종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은 동맹국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의 종료가 확장억제 효과를 크게 약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절 해외 배치 핵무기의 억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핵 위협의 신뢰성은 핵무기가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국

8) Weede, E. 1983. Extended Deterrence by Superpower Allianc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2), 231-254. p235.

9) Leeds, Brett Ashley, Jeffrey M. Ritter,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Andrew G. Long. 2002.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28: 237-260. p11 of the ATOP codebook.

영토를 겨냥한 타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핵 위협의 신뢰성이 높다. 국가의 핵심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자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의 살상력이 상당하게 심하기 때문이다.

후견국은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잠재적 공격국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과 피후견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의지를 잠재적 공격국으로 하여금 확신시키는 것이다.[11]

따라서 핵보유국인 후견국은 피후견국에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사례는 총 24개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후견국의 주된 목적은 핵우산의 신뢰성을 입증하여 확장억제 효과를 강화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50년대에 소련의 침략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특정 NATO 국가(영국, 이탈리아, 터키, 서독일)에 전술 핵무기를 투입하였다.[12] 이와 같은 핵무기 배치는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보호하는 강한 의지를 잠재적 공격국에 보여주며 다른 의지가 약한 국가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핵무기 배치는 상당히 높은 코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후견국을 보호할 의지가 약한 후견국이라면 피후견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비싼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동맹국의 개입과 핵전쟁으로의 확전으로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13]

정책 결정자는 보편적으로 전진 기지에 배치한 핵무기는 핵 보복의

---

10) Howard, Michael. 1984. *The Causes of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95-98. Jervis, Robert. 1984.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126-46.

11) Huth. 1990. pp. 271-72.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for Atomic Energy. 1978. "History of the Custody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July 1945 through September 1977." Partially declassified and released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pp83-84.

13) Morrow, James D. 2000. "Alliances: Why Write Them Dow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63-83. p.70.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후견국 본토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보다 군사충돌 지역에 처한 지휘관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더욱 분명하기 때문이다.[14] 예를 들어,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핵무기는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한다. 소련이 유럽을 공격할 경우 미국 군인의 살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치는 확장억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15]

또한 핵무기의 배치를 통해 후견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피후견국 측에 군사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특히 전술 핵무기는 피후견국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잠재적 공격국에게 군사충돌이 차선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이다.

한편 확장억제에 있어 핵무기의 효과와 재래식 무기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다. 핵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로서 핵전쟁의 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에 비해 핵무기는 확장억제의 효과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후견국의 승패 결과를 떠나서 공격국은 분명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핵 공격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억제가 실제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핵무기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 충돌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끔찍한 결과를 잠재적 공격국에게 확인시켜준다.[16] 따라서 잠재적 공격국의 공격 의도를 사전에 막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반면 핵무기에 비해 재래식 무기가 갖고 있는 살상력은 군사충돌의 승패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잠재적 공격국은 기회가 생기면 공격을 가하도록 할 것이다.[17] 따라서 군사력 측면에서 재래식 무기보다 핵무기는 더욱 높은 확장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18]

---

14) Bracken, Paul J. 1983. *The Command and Control of Nuclear Forces / Paul Bracken*. Print.

15) Bernard Burrows, 1972. *The Security of Western Europe* (London, 1972),p67; Freedman, Lawrence. 2003.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3r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353.

16) Weede, 1983. p235.

17) Wirtz, James J. 2018. "How Does Nuclear Deterrence Differ from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 SSQ 12.4 (2018): 58-75. Web. p63.

그러나 신뢰성 측면은 상황이 달라진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중 어느 무기가 더욱 높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핵억제는 상당히 높은 살상력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반면 재래식 무기는 군사충돌의 승패 여부를 예측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19]

정치적 목적에 비해 핵무기의 파괴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약속을 잠재적 공격국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핵무기 사용을 통해 얻으려하는 정치적 목적 자체가 아예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처럼 핵무기가 무력분쟁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정치적 무기로 간주되어 왔다.[20] 때문에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낮은 신빙성을 갖는다. 신뢰성 측면에서 핵무기는 확장억제 자산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21]

역사적 사례를 보면 핵무기 배치는 오히려 피후견국의 안보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1962년 쿠바 위기는 바로 적절한 예시이다. 퍼먼(Fuhrmann)과 셰서(Sechser)는 핵보유국과의 방위동맹, 그리고 추가적 핵무기의 배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22] 통계분석 결과에 따라 핵보유국과의 방위동맹은 피후견국으로 하여금 군사충돌을 당할 가능성을 낮춘다. 즉 핵보유국과의 방위동맹은 적대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핵무기 배치를 통해 확장억제 효과를 높일 수는 없다. 핵무기 배치를 하지 않고 핵보유국과의 방위동맹을 통해 잠재적 공격국을 억제시켜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다.

---

18) Huth, 1990. p273; Fuhrmann and Sechser. 2014. p930
Mearsheimer, John J. 1984.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9(3):19-46. p20.

19) Wirtz, 2018. p64.

20) Paul, T. 1995. Nuclear Taboo and War Initiation in Regional Conflict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9(4), 696-717. p699

21) Huntington, Samuel P. 1983. "Conventional Deterrence and Conventional Retali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8, No. 3 (Winter 1983-1984), pp. 32-56. p34.Paul, 1995. p711. Geller, Daniel S. 1990. "Nuclear Weapons, Deterrence, and Crisis Escal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4(2): 291-310. p307. Huth and Russett. 1988. p38.

22) Fuhrmann and Sechser. 2014. pp.928-30.

다시 말해 핵무기의 새로 배치가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하더라도 피후견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피후견국이 후견국과 방위동맹을 맺은 한 안보상황이 악화되지 않는가? 본 연구는 핵무기의 철수와 피후견국의 안보를 연결시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한다.

## 제 3 절 해외 배치 미군의 억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주둔군의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미군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미군이 피후견국에 투입하기 전과 투입하기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확장억제 효과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미군 주둔이 피후견국의 병력 조정, 방위비 지출, 외교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23] 레이크(Lake), 그리고 마체인과 모건(Machain and Morgan)은 피후견국의 분쟁 연루, 방위비 지출, 병력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미군 주둔이 피후견국의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병력 조정 측면에서 미군 주둔이 피후견국의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규모가 피후견국의 병력 규모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를 통해 피후견국의 군사비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사했으며 미군의 주둔은 피후견국의 군사비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지었다.[24]

안보 차원에서 미군 주둔은 군사력을 과시할 뿐 아니라 '트립 와이

---

23) Machain, Carla Martinez, and T. Clifton Morgan. 2013. "The Effect of US Troop Deployment on Host States' Foreign Policy." *Armed Forces & Society* 39(1): 102-23. pp112-14; Allen, Michael, VanDusky-Allen, Julie and Flynn, Michael. 2014. The Localized and Spatial Effects of US Troop Deployments on Host-State Defense Spending. *Foreign Policy Analysis*, 12, 674-694. p674; Fuhrmann and Sechser 2014. pp.929-30; Kane Tim. 2012. "Development and US Troop Deployments." Foreign Policy Analysis 8(3): 255-273. p269

24) JONES, GARETT, AND TIM KANE. 2012. US Troop Deployments and Foreign Economic Growth. *Defence and Peace Economics* 23 (3): 225-249.

어'의 역할로 미국의 참전 의지를 확신시킬 수 있으므로 확장억제 효과를 높인다.[25] 피후견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의 증가에 따라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는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보다 전지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이 군사충돌이 일어날 때 빠르게 작전에 투입시켜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인다.[26]

또한 미군 주둔은 잠재적 공격국을 억제할 뿐 아니라 피후견국에 대한 영향력도 높임으로써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키는 행동을 억제한다. 따라서 미군 주둔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27]

다음으로 병력 감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미군 철수가 피후견국 안보 환경의 불안정을 초래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대체로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눈다. 하나는 미군 철수는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다. 미군 주둔은 피후견국으로 하여금 대담한 행동을 취하여 안보상황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위험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남아있는 미군으로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 피후견국에 여전히 미군이 남아있고 양국 간의 안보조약이 깨지지 않는 한 미군 감축이 필연적으로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28]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이 감축하더라도 적대국이 피후견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자 할 때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은 다른 유형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군사충돌에 개입할 수 있다.[29] 예를 들어 미국은 재래식 무기 이전과 같은 수단을 통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인다.

---

25) Machain and Morgan. 2013. p114; Fuhrmann and Sechser. 2014. p930

26) Art, Robert J. 2013. *A Grand Strategy for America / Robert J. Art*. 2013. Cornell Studies in Security Affairs. Web. p145.

27) Brooks, Stephen G, G. John Ikenberry, and William C Wohlforth. 2012.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7.3 (2012): 7-51. Web. p33-34

28)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16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Foreign Affairs 95(6):164-171. MacDonald, Paul K., Joseph M. Parent. 2011.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5(4):7-44. pp42-43.

29) Posen, Barry. 2014.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143.

한편 미군 주둔은 오히려 저항세력과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미국이 지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일 경우도 있다. 때문에 미군 감축은 어느 정도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며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인을 감소시켜준다.[30]

다른 하나는 미군 주둔은 적대국의 공격, 그리고 피후견국의 대담한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며 미군의 철수는 피후견국의 안보 환경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31] 미국의 강한 군사력과 기술적 우위를 감안할 때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은 피후견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같은 확장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간, 거리, 정치적 이익 등 현실적 문제를 무시한다. 이라크 전쟁을 경험한 바와 같이 필요한 규모의 병력을 작전 지역에 투입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32]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 측 전투력의 하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적대국이 미군의 군사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참전 의지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피후견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33] 동시에 미군 감축은 동맹국을 불안하게 하고 잠재적 공격국의 적대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34] 뿐만 아니라 미군 감축은 지역 파워의 군비 경쟁, 핵 확산과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지역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지역에 다극적 체제로 바뀌거나 지역 패권국이 나타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군사충돌,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

30) Walt, Stephen M. 2006. *Taming American Power: The Global Response to U.S. Primac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Gholz, Eugene, Daryl G. Press, and Harvey M. Sapolsky. 1997. "Come Home,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21(4):5-48. p31.

31) Machain and Morgan. 2013. p117; Brooks, Ikenberry, and Wohlforth. 2012/13. p37.

32) Flournoy, Michele, and Janine Davidson. 2012. "Obama's New Global Posture." *Foreign Affairs* 91(4):54-63. p55.

33) Choi, Young-Hi. 1978. "US Troop Withdrawal from Korea." Asian Affairs 5(3):189-191. pp190-91. U.S. Department of State. 200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19, Part 1: Korea, 1969-197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114.

34) Dueck, Colin. 2015. *The Obama Doctrine : American Grand Strategy Today / Colin Dueck*. New York,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Web. p96.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35]

미군 철수와 관련된 실증 연구는 이론 연구만큼 풍부하지 못한다. 주한 미군 철수에 관한 선행연구는 철수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철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36]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안보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는 대체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상황전개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군사적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으며 북한의 진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냉전적 발상에 기초한 시대착오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은 남북관계 진전과 지역 안정을 방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37]

아베(Avey), 그리고 마코위츠와 리어던(Markowitz and Reardon)은 한국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군이 철수한 후 한반도에는 불안정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38] 이 결과에 대해 미군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기보다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는 피후견국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된다는 판단으로 주둔군 철수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는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군 철수는 피후견국 안보상황의 개선이라는 판단이 아닌 미국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거나 대선에 유리한 정치적 성취가 필요하다는 국내정치적 차원의 이유 때문이다.[39] 이러한 통계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아

---

35) Brooks, 2012. p37

36) 유인석. 2006.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 = Nixon Administration's Troop Withdrawal Policy from South Korea : The Role of Stabilizer and Partial Reduction / 유인석.p6.

37) 조윤영, 이상현. 2004.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 80년대 말 철군 논의와 한반도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 167-96. Web.p174

38) Avey, Paul C, Markowitz, Jonathan N and Reardon, Robert J. 2018. Do US Troop Withdrawals Cause Instability? Evidence from Two Exogenous Shock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Volume 3, Issue 1, January 2018, Pages 72-92. p44.

39) Cooley, Jason. 2019. "Do Political or Security Conditions Determine When American Security Transfers Are Made?" Journal of Strategic Security 13(2): 78-93. p91.

니면 특정 지역에만 성립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론적 연구에 주목하거나 사례 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여 개별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개별 국가나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냈다.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와 관련된 일반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난 특정 국가로부터의 안보 변화는 다른 시기, 다른 국가에 확장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주는 영향이 또한 다른지를 비교하지 못한다. 보편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가설을 도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 치중하여 특정한 경우만 설명하였던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와 피후견국의 안보에 관한 일반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 설계

## 제 1 절 연구 대상

### 1. 분석 개념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따른 피후견국의 안보상황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에 연구의 핵심 개념인 억제, 확장억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 1) 억제(Deterrence)

억제는 확장억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확장억제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억제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는 억제를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40] 즉 억제란 주로 잠재적 공격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억제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다. 억제는 상대방을 단념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와는 다르다.[41] 강제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42]

기본적인 억제 관계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국가와 군사충돌을 통해 현상을 바꾸려는 국가, 이 두 행위체로 구성된다. 현상유지 국가는 외교적 행동, 경제적 제재 및 군사력 사용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억제력이 작동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군사적 맥락에서 보면 억제는 적대국

---

40) US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Joint Publication 1-02 (Washington, DC: DoD , 2011) , p.107

41) Snyder, Glenn H. 1961.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9.

42) 강제의 개념은 Thomas Shelling. 1996.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6. pp69-91.

에 의한 무력사용의 예방이다.[43] 억제를 위한 군사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핵 억제와 재래식 억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핵 억제와 재래식 억제는 여러 측면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도 다르다.[44]

억제 이론에서 억제의 쌍방은 모두 합리적 행위체로 간주된다. 합리적 행위체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행동의 득실을 따져보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행위체이다. 따라서 억제의 핵심은 위협을 받은 상대방의 대응이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생각되기 하여 대응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억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A국가가 B국가에게 특정한 행동을 취할 경우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한다.

2. A국가의 처벌 위협이 부재한다면 B국가는 특정 행동을 취한다.

3. B국가는 A국가가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행동을 포기한다.[45]

또한 억제는 평시에서의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와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억제(Immediate Deterrence)로 구분된다.[46] 일반억제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들 간 잠재적 위협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긴급억제는 적대국이 위협을 가하거나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경우 현상유지 국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억제와 긴급억제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은 다를 수 있다.

---

43) Vesna Danilovic, “Conceptual and Selection Bias Issues in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5, No.1 (February 2001), p.99.

44) 핵 억제와 재래식 억제의 차이는 Wirtz, J. 2018. How Does Nuclear Deterrence Differ from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 SSQ, 12(4), 58-75.

45) Hedley Bull,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pp118-119.

46) Patrick Morgan, 1983.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New York: SAGE Publications,1983), p.30

2)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억제는 보호대상에 따라 직접억제(Directed Deterrence)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로 구분된다. 직접억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며 확장억제는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같은 제3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확장억제는 냉전 초기 유럽에서 구소련이 재래식 전력을 활용하여 서유럽을 공격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략으로 시작되었다.[47]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자국 본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 왔다.

확장억제에 있어 잠재적 공격국, 공격 대상인 국가를 지칭하는 피후견국, 공격 대상인 국가를 보호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후견국 이 세 행위체가 기본으로 존재한다. 확장억제의 목적은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을 공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며, 동시에 결코 공격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억제와 같은 의미로 확장억제가 성사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을 공격하고자 한다.

2. 후견국이 잠재적 공격국에게 피후견국을 공격할 경우 처벌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한다.

3. 잠재적 공격국은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피후견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확장억제는 피후견국을 보호할 후견국의 능력과 의지가 잠재적 공격국에 전달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군사충돌이 일어날 때 후견국이 공격국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군사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피후견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러한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잠재적 공격국의 인식에 달려 있다.[48] 이 때 후견국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할 뿐 아니라 피후견국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시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피후견국을 보호하는 후견국의 의지에 있어 피

47) 조동준. 2017. "북한의 핵능력 증가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주는 함의와 대처방안." 한국국가전략 2(1): 253-306. p264.

48) Huth, 1990. p272.

후견국, 혹은 피후견국 지역과 관련되는 후견국의 고유한 이익(intrinsic interest)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정받는다.[49] 이 외에 후견국들은 손발 묶기(hand-tying), 혹은 매몰 비용(sunk costs) 등의 수단을 통해 피후견국을 보호하는 의지를 잠재적 공격국에 강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후견국은 피후견국에 군대를 파견시키거나 피후견국과 공식적인 군사동맹을 맺는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또한 확장억제의 대상이 반드시 적대국이 아니다. 후견국은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대국에 대한 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피후견국의 공격적 행동을 단속하기도 한다.

확장억제도 상황에 따라 일반 확장억제(General extended deterrence)와 긴급 확장억제(Immediate extended deterrence)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확장억제에 초점을 맞춘다. 긴급 확장억제는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후견국은 피후견국을 겨냥한 위협을 인지하며, 잠재적 공격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후견국이 선언이나 군사력 행동을 통해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는 특징을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다.[50] 이미 발생한 위기에서 잠재적 공격국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긴급 확장억제와 달리 일반 확장억제는 애초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2. 분석 대상 및 분석 시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따라 피후견국의 안보상황 변화이다. 먼저 어떤 확장억제 자산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지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외 배치되는 확장억제 자산을 배치되는 유형, 영역, 목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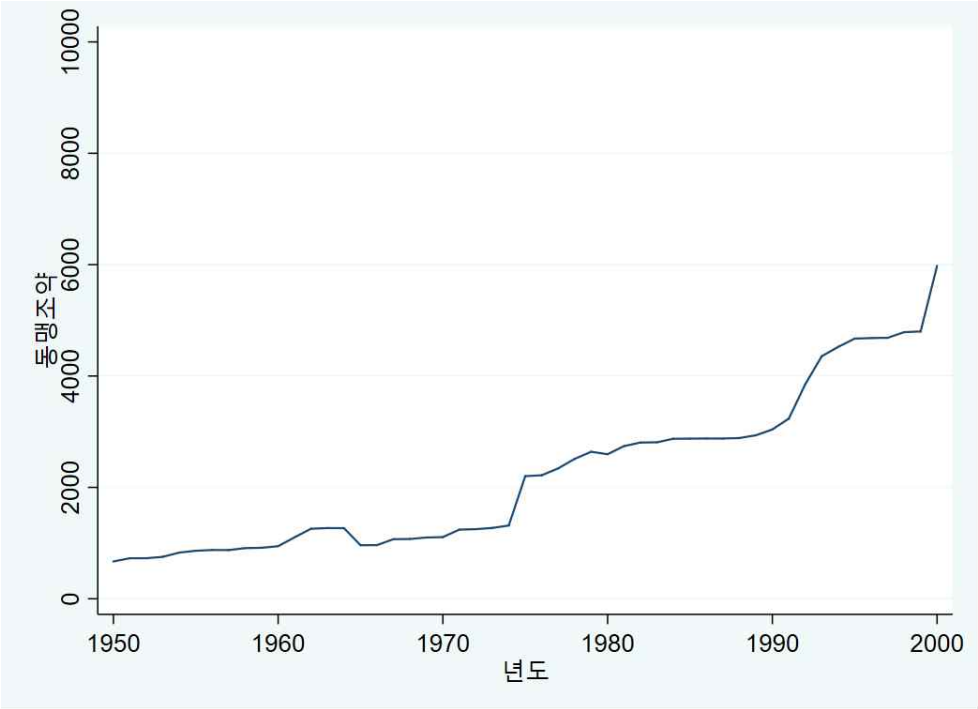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에서 동맹조약, 핵무기, 주둔군 세 가지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는 동맹국과 적대국들에게 미래의 의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동맹

---

49) Danilovic, Vesna. 2001. “The Sources of Threat Credibility in Extended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3): 341-69. pp.347-348.
50) Huth, 1988. p.424.

을 맺는다. 동맹국에 대한 의무에 따라 동맹조약은 공격 조약(offense pacts), 방위 조약(defense pacts), 중립 조약(neutrality pacts), 불가침 조약(nonaggression pacts), 협상조약(consultation pacts)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51] 이 다섯 가지 동맹조약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두 국가 간 여러 가지 동맹조약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 간 동맹조약을 맺는 사례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그림 III-1>)

<그림 III-1> 1950-2000년간 동맹조약 변화 상황




出處: Leeds, Brett Ashley, Jeffrey M. Ritter,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Andrew G. Long. 2002.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28: 237-260.

51) Leeds, Brett Ashley, Jeffrey M. Ritter,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Andrew G. Long. 2002.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28: 237-260. p11 of the ATOP codebook.

냉전 시기 미국, 소련, 영국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해외에 핵무기 배치 사례는 총 24건이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은 서유럽, 아시아, 대서양 지역의 14개 국가, 소련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6개 국가, 영국은 서유럽, 지중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4개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이 외에 1991년 소련의 붕괴에 따라 우르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핵무기가 남겨진 경우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후견국이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피후견국에 배치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 III-1>는 핵무기가 어떤 국가에 얼마동안 배치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표 III-1>1950-2000년간 핵무기 해외 배치 상황

| 후견국 | 피후견국 | 연도 |
|---|---|---|
| 영국 | 사이프러스 | 1961-1975 |
| | 말레이시아 | 1963-1965 |
| | 싱가포르 | 1965-1970 |
| | 서독일 | 1972-1998 |
| 소련 | 쿠바 | 1962 |
| | 체코슬로바키아 | 1969-1990 |
| | 동독일 | 1958-1991 |
| | 헝가리 | 1974-1989 |
| | 몽골 | 1967-1992 |
| | 폴란드 | 1967-1990 |

| | | |
|---|---|---|
| 미국 | 캐나다 | 1964-1984 |
| | 덴마크 | 1958-1965 |
| | 모로코 | 1954-1963 |
| | 필리핀 | 1957-1977 |
| | 한국 | 1958-1991 |
| | 스페인 | 1958-1976 |
| | 대만 | 1958-1974 |
| | 벨기에 | 1963-2000 |
| | 영국 | 1954-2000 |
| | 그리스 | 1960-2000 |
| | 이탈리아 | 1956-2000 |
| | 네덜란드 | 1960-2000 |
| | 터키 | 1959-2000 |
| | 서독일 | 1955-2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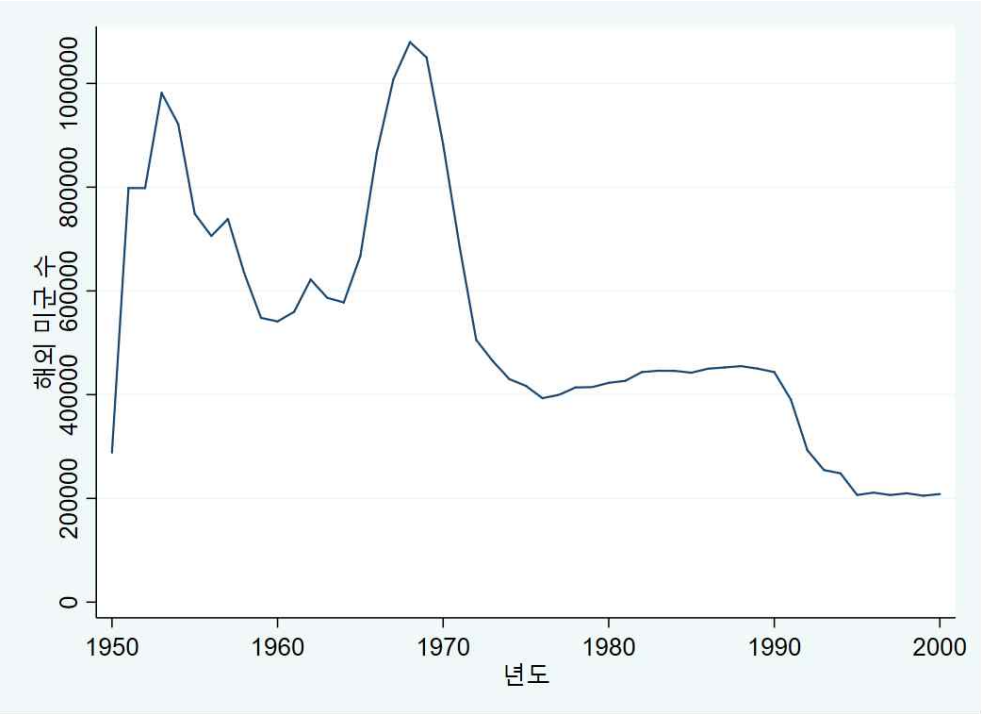
出處: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2014a. "Nuclear Strategy, Nonproliferation, and the Causes of Foreign Nuclear Deploymen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p. 466을 참고하였다.

註: 자료는 2000년을 기준으로 우측 절단 되었다.

주둔군의 경우 데이터 접근성으로 인해 미군을 연구 대상으로 정한다. 냉전 시기부터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시켜 왔다. 미군 배치 데이터(U.S. Troop

Deployment Dataset)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50만 명이 넘는 미군이 해외에 주둔해 있었다.[52] 이 시기 해외 주둔 미군의 변화 추세는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1950-2000년간 미군 해외 주둔 상황




出處: Tim Kane, Ph.D., U.S. Troop Deployment Dataset 1950-2005, The Heritage Foundation, based on annual records from Department of Defense, DIOR.

註: 1951년, 1952년 자료는 추정 되었다.

<그림 III-2>에 보여주듯이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해외 주둔 미군은 대규모한 철수를 세 번 경험하였다. 첫 번째 철수는 1953년쯤에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주한미군의 재조정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규모

52) Tim Kane, Ph.D., Troop Deployment Dataset, 1950-2005, The Heritage Foundation, Center for Data Analysis, current as of March 1, 2005, at http://www.heritage.org/Research/NationalSecurity/troopsdb.cfm. (검새일: 2021.11.06.)

병력을 파견했으며 전쟁 종료 후 2개 사단 7만 명을 잔류시키고 1955년까지 약 25만 명을 철수하였다.

둘 번째 철수는 1969년 베트남 전쟁 후기 미군의 철수이다. 남베트남의 안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은 1961년부터 베트남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1969년까지 약 55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파병하였다. 이후 닉슨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내세우며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결정했고 1975년까지 완전히 철수하였다.

셋 번째 철수는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남에 따른 미군의 철수이다.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제압한 후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678에 기초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53] 미군 약 43만 명이 이라크에 파견되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압도적 공군력을 바탕으로 1개월간 10만여 회에 걸친 공중폭격을 감행하여 이라크의 주요 시설을 거의 파괴하였다. 결국 이라크는 1991년 2월 28일에 전쟁종식을 선언하였고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철수하였다.

전쟁 종료에 따른 대규모 철수 외에 각국 주둔 미군이 소규모 철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는 피후견국마다 미군의 변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정부가 국가 주권을 갖고 있는 피후견국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은 괌, 푸에르토리코, 존스턴 환초, 미드웨이 환초 등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했었으나[54] 이러한 사례는 후견국의 통제 하에 있는 영토에 핵무기가 배치된 경우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주둔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확장억제 자산을 피

53) 결의안 678호는 19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연합군은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54)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Appendix B.

후견국에 배치한 사례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군은 대부분의 경우 적대 세력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해외에 군대를 파견했으나 이 외에 엔지니어링, 외교 등의 원인으로 비전투 부대를 파견시킨 경우도 있다.[55] 이러한 사례는 확장억제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부록에 <표 III-2>는 미군이 확장억제가 아닌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로 설정한다. 1950년부터 연구가 시작하는 것은 데이터의 접근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2000년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냉전이 종료되고 10년 정도의 기간을 추가로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체제의 변화가 한 국가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증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정략적 데이터가 2000년까지를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현실적 고려도 있다.

##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핵심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수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채택하는 주요 연구 방법은 정량적 방법이다. 종속변수인 관측년도에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을 사용하고 오차 분산을 줄이기 위해 다이애드(dyad)의 군집을 선택한다. 또한 연구 대상인 국가들이 자국의

55) 미국이 미국 대사관을 경호하기 위해 일부 군인들을 해당국가에 파견시킨 사례는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포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이다. 2010년에 약 1,300명의 미국 해병대가 약 148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Diplomatic Security 2010). 지역마다 평균 9명의 군인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통계분석 결과를 편향시키지 않기 위해 이러한 소규모 배치를 연구대상으로 제외하고 100명 이상의 배치만을 연구대상으로 정한다. Allen, 2016. p682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연구의 핵심적인 논리로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전제한다.

이에 추가하여, 본 연구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해 도출된 잠정적 결론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 중에서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두 개 연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방법론적으로 양자의 장점을 취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초점을 맞추어 한미방위동맹과 핵무기 철수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설득력을 높일 것이다. 한국 사례는 본 연구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most-likely test case)에 해당하고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를 적용 가능하며 다른 사례들에 비하여 자료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국지적 상황보다 미국의 세계전략, 특히 아시아 전략의 맥락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56] 반면 한국 사례는 본 연구가 예측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57]

## 제 3 절 가설 설정

본 절에서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후견국의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피후견국에 있었던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는지 여부다.

후견국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타국의 안보도 자국의 국가이익으로 간주할 때 피후견국이 적대국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후견국은 군사적 보복 경고로 위협한다. 문제는 그 위협의 효과가 쉽사리 달성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확장억제는 두 가지 요인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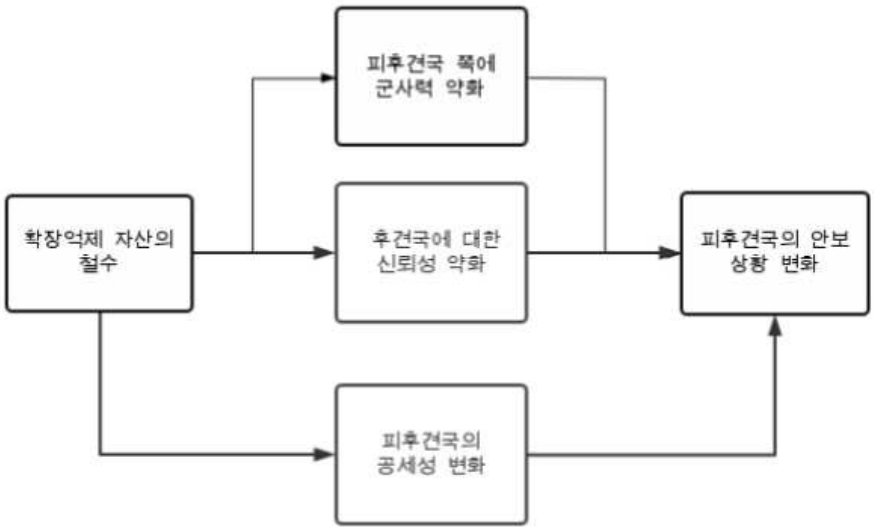
56) 이상현, and 조윤영. 2004. p169.

57) Eckstein, Harry.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7: Strategies of Inquiry. Reading: Addison-Wesley Press.

신뢰성이 달라진다. 첫째, 후견국의 군사적 능력이다. 둘째, 피해를 감내하겠다는 후견국의 의지다. 따라서 후견국이 잠재적 공격국의 정치적 목적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력이 있는지 여부와 피후견국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국까지 군사충돌에 휘말리는 피해를 후견국이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잠재적 공격국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후견국은 확장억제 자산을 피후견국에 투입시킴으로써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두 측면에서 잠재적 공격국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킨다. 첫째, 피후견국 측은 군사충돌에 투입 가능한 군사력이 약화된다. 둘째, 잠재적 공격국은 군사충돌이 발생 시 후견국이 개입하는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져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이 악화된다.

동시에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외교정책, 특히 공격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해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진 행위자가 위험 수용적(risk-taking)으로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국이 이익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후견국의 확장억제 자산이라는 보험을 가진 피후견국은 보험이 없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할 경향이 있다.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따라 피후견국의 공격적 행동이 억제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 안보상황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III-3 >)

<그림 III-3>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따른 연쇄적 과정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에 따라 확장억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다른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이 철수될 때에도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동맹조약의 종료는 피후견국에 대한 후견국 의무의 종료를 의미한다. 때문에 동맹조약의 종료는 적대국이 후견국의 위협 때문에 가하지 못하던 위협이나 공격을 다시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후견국의 안보상항이 악화될 수 있다.

핵무기의 경우 핵보유국은 굳이 무기 배치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맹약속을 통해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피후견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핵보유국인 후견국과의 방위동맹으로 적대국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의 철수는 핵무기의 신규 배치와 달리 피후견국을 보호하는 후견국의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잠재적 공격국이 군사충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한다.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과 잠재적 공격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미국

의 전략적 이익이나 영향력의 약화로 인식시킬 수 있다. 비록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 일부분의 미군이 여전히 피후견국에 남아 있다. 그러나 위기 시 피후견국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잠재적 공격국은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도발로부터 군사적 충돌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 1.** 동맹조약이 종료된다면 과거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설 2.**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설 3.**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제 4 장 실증분석

## 제 1 절 데이터 및 변수 설정

### 1. 분석 단위 및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방향성이 있는 이벤트 다이애드 연도(event-directed-dyad-year)'이다. 방향성이 있는 다이애드 데이터는 두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A와 국가B 사이에 군사충돌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A가 국가B를 공격했는지', 아니면 '국가B가 국가A를 공격했는지'처럼 군사충돌을 일으키는 편과 당하는 편으로 구분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58]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따라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는지를 확인하는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피후견국이 잠재적 공격국으로부터 관측년도에 공격을 당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다이애드(politically relevant dyad)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59]

이벤트 단위는 군사충돌 사안을 의미한다. 다이애드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쌍이 동일한 관측연도에 둘 이상의 군사충돌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58년 미국

---

58) Bennett, D. Scott, and Allan Stam. 2000. Research design and estimator choices in the analysis of interstate dyads: When decisions matt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 (5): 653-85.

59) 정치적으로 관련된 다이애드는 모든 근접한 다이애드나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강대국인 모든 다이애드로 정의된다. Maoz, Zeev, and Bruce Russett. 1993.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624-638.
근접한 다이애드를 정하기 위하여 급접성 변수를 활용하다. 근접성 변수는 두 국가가 국경을 공유하는 경우, 해상 거리가 1-12 해리(nautical mile), 13-24 해리, 25-150해리, 151-400해리, 401해리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로 범주화 된다. 본 연구에서는 400해리 이내에 떨어져 있는 국가 쌍을 근접한 다이애드로 한정한다.

과 소련 사이에 두 개의 군사충돌을 동시에 겪고 있었다. 이처럼 양국이 같은 관측년도에 두 개 이상의 군사충돌을 겪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군사충돌별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데이터는 COW Project의 국가간 군사 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이하 MIDs)[60] 데이터를 사용한다.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군사충돌은 총 1291회로 관측된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이다. 본 연구는 관찰이 가능한 군사적 충돌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조작화하고자 한다. 피후견국이 군사적 충돌을 벌일 확률이 높을수록 안보상황의 악화를 의미한다. 군사적 충돌로 포함되는 범주는 피후견국의 군사력 사용(use of force)이나 전면전(war)으로 제한한다. 군사력 사용 위협(threat to use of force), 무력시위(display of force)와 같은 실질적인 군사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저강도의 충돌은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61] 관측년도에 군사충돌이 없다면 0,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한다면 1,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킨다면 2, 군사충돌을 일으킨 주체가 확실하지 않다면 3의 값을 매김으로써 종속변수를 조작화한다.

데이터로 MIDs 데이터를 활용한다.

---

60) Palmer, Glenn, Roseanne W. McManus, Vito D'Orazio, Michael R. Kenwick, Mikaela Karstens, Chase Bloch, Nick Dietrich, Kayla Kahn, Kellan Ritter, Michael J. Soules. 2020. "The MID5 Dataset, 2011-2014: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Working paper. "국가 간 군사충돌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부, 공식적인 대리인, 자산 혹은 영토로 향하는 군사력 사용 위협, 무력시위 또는 군사력 사용과 같은 행위이다." (Jones et al. 1996: 163).

61) 후견국에 있어 낮은 수준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어렵다. 잠재적 공격국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피하고 후견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빠르게 행동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 공격국은 제한된 군사력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데스트할 경향이 있다. George, Smoke, and Smoke, Richard. 1974.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 Theory and Practice / by Alexander L. George and Richard Smoke*. Print.

3. 독립변수

본 연구는 후견국의 확장억제 자산이 철수됨에 따라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하는 가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이다.

동맹조약의 종료와 피후견국의 안보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맹조약 의무와 조항 데이터(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이하 ATOP)를 활용한다.[62] ATOP 데이터에서 동맹조약을 동맹에 대한 의무에 따라 공격 조약(offense pacts), 방위 조약(defense pacts), 중립 조약(neutrality pacts), 불가침 조약(nonaggression pacts), 협상조약(consultation pacts)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63] 그 중에서 방위 조약과 공격 조약은 군사적 충돌에서 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맹관계로 간주된다(이하 공수동맹). 따라서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에 위협이나 공격을 가하고자 할 때 후견국의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립 조약은 분쟁 발생 시 중립 수호, 불가침 조약은 상호 군사적 충돌의 자제, 협상 조약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국제적 위기 발생 시 협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볼 필요가 있다.[64]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맹조약을 적극적 동맹과 소극적 동맹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피후견국은 여러 국가와 동맹 관계를 맺는다. 동맹국에 따라 동맹의 종료에 따른 확장억제 효과도 변화한다. 동맹국이 강하고 피후견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적대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효과적이고 동맹조약의 변화가 동맹국의 안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견국의 국력을 가중 합산한 조정된 동맹 파워(adjusted alliance power)를 통해 피후견국의 동맹 변화를 조작화한다. 후견국의 국력은 타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후견국의 군사적•기술적 능력, 그리고 후

62)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Data. http://atop.rice.edu/data (검색일: 2021.11.16.)

63) Brett Ashlev Leeds. 2020,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ATOP) Codebook(Version 5.0 December 3, 2020). p11.

64) Leeds, Ritter, Mitchell, and Long, 2002: p238

견국과 피후견국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후견국의 능력이 피후견국 지역에서 손실 없이 발휘될 것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국력은 COW 프로젝트의 국가물질능력 데이터셋(NMC: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에 기록된 국가역량종합지표(CINC: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이하 CINC) 점수를 사용한다.[65] 두 국가 간 거리는 유진 소프트웨어(EUGene Softw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text{Adjusted alliance power} = \sum_{i=0}^{n} \frac{CINCally}{\ln\ (distance + e)}$$

피후견국의 안보에 있어 핵무기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핵무기 관련 변수를 핵무기의 유무와 핵무기의 변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핵무기의 유무는 핵무기가 피후견국에 배치된 시기에 1, 배치되지 않는 시기에 0의 값을 매김으로써 조작화한다. 동시에 핵무기의 변화는 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 본다. 하나는 핵무기의 새로 배치와 관련된다. 핵무기가 새로 배치된 후 3년 이내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는다면 0의 값을 매긴다. 다른 하나는 핵무기의 철수와 관련된다. 핵무기가 철수된 후 3년 이내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는다면 0의 값을 매겨 두 변수를 통해 핵무기의 변화 상태를 조작화한다.

데이터로 퍼만과 세셔(Fuhrmann and Sechser)의 해외 핵무기 배

65)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 version 5.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 (검색일: 2021.11.16.), David Singer J.,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1972,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1972), pp.19-48; David. Singer, J., 1987,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14: 115-32. CINC 점수는 군사비 지출, 군인 수, 철강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총 인구 수, 도시 거주 인구 수를 종합하여 각국의 국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치 데이터를 활용한다.[66]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총 24개의 해외 핵무기 배치 사례 중 17개 사례가 핵철수를 동반하였다.[67] 전체 사례 중 핵무기가 철수된 비율은 약 7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미군 감축의 영향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연구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유일하게 해외에서 군대를 주둔시킨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분석 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 감축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군이 한번이라도 주둔된 적 있는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 이를 위해 팀 케인(Tim Kane)이 만든 195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글로벌 미군 배치 데이터 세트(US Troop Deployment Dataset)와 ATOP데이터를 활용한다.[68] 보다 정확히 미군 감축과 피후견국의 안보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를 임계값(threshold)으로 정하고 최근 3년 동안 미군 수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감축된다면 1, 감축되지 않는다면 0의 값을 매겨 조작화한다.[69]

<표 Ⅳ-1>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독립변수의 통계값을 보여준다.

---

66) Fuhrmann and Sechser, 2014b; Foreign Nuclear Deployment Dataset. http://www.matthewfuhrmann.com/datasets.html(검색일: 2021.11.16.),

67) 독일의 경우 냉전 시기 영국과 미국이 모두 서독일에서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영국은 1998년에 핵을 철수했으나 미국은 아직까지 핵을 철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일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68) Tim Kane, Ph.D., Troop Deployment Dataset, 1950-2005, The Heritage Foundation, Center for Data Analysis, current as of March 1, 2005, at http://www.heritage.org/Research/NationalSecurity/troopsdb.cfm.

69) Avey, Jonathan, Reardon. 2018. Appendix for "Do US Troop Withdrawals Cause Instability? Evidence from Two Exogenous Shocks on the Korean Peninsula". p8. 저자는 임계값을 10%로 바꾸어 연구를 다시 진행해봤는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표 Ⅳ-1>독립변수의 통계값

| 독립변수 | | 관측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동맹조약 | 동맹 역량a | 1056388 | 0.0247 | 0.045 | 0 | 0.3373 |
| | 신규 동맹 역량a | 1056388 | 0.0001 | 0.002 | 0 | 0.0768 |
| | 동맹 역량 감소a | 1056388 | 0.0002 | 0.004 | 0 | 0.1763 |
| | 동맹 역량b | 1056388 | 0.0401 | 0.056 | 0 | 0.3373 |
| | 신규 동맹 역량b | 1056388 | 0.0004 | 0.006 | 0 | 0.1994 |
| | 동맹 역량 감소b | 1056388 | 0.0001 | 0.003 | 0 | 0.1667 |
| 핵무기 | 핵무기 배치 | 1056438 | 0.0781 | 0.268 | 0 | 1 |
| | 핵무기 신규 배치(3년) | 1056438 | 0.0060 | 0.077 | 0 | 1 |
| | 핵무기 철수(3년) | 1056438 | 0.0064 | 0.080 | 0 | 1 |
| 주둔군 | 미군 감축 | 234835 | 0.1314 | 0.338 | 0 | 1 |

註: 평균, 최소값, 최대값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했고, 표준편차는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 이외에 피후견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한다. 피후견국의 안보는 국가의 개별적 특성(monadic attributes), 피후견국과 잠재적 공격국 사이의 양자적 특성(dyadic attributes), 그리고 국제 체제적 특성(international systemic attributes)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 국가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변수

(1) 국력

국가의 국력은 국가안보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국력을 통해 군사충돌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한 국가일수록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약한 국가는 군사충돌을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70]

국력을 측정하기 위해 COW 프로젝트의 국가물질능력 데이터셋에 기록된 국가역량종합지표를 사용한다.[71] CINC score는 군비, 군인력, 에너지 소비, 철강 생산량, 도시 인구 및 인구 여섯 가지 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GDP에 비해 국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72]

(2) 민주주의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화적으로 접근하고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공격 가능성이 낮다.[7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통제변수에 포함한다.

---

70) Bueno de Mesquita, Bruce and David Lalman. 1992. *War and Rea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107-111. Morgan, T. Clifton, and Glenn Palmer. "A Two-good Theory of Foreign Policy: An Application to Dispute Initiation and Reciproc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22.3 (1997): 225-44. Web.p237.

71) David Singer J.,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1972,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1972), pp.19-48; David. Singer, J., 1987,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14: 115-32.

72) Heckman, Garrett Alan, 2009, "Power capabilities and similarity of interests: a test of the power transition theory" . LSU Master's Theses. 712.p17-18.

73) Miriam Fendius Elman, 1997, “The Need for a Qualitative Test of the Democratic Peace Theory,” in Paths to Peace: Is Democracy the Answer?, ed. Miriam Fendius Elma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7), p10-14. Dafoe, A., Oneal, J. R., & Russett, B. 2013. The Democratic Peace: Weighing the Evidence and Cautious Inference The Democratic Peace: Weighing the Evidence and Cautious Infer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1), 201-214. p201

이 변수는 Polity5 프로젝트의 민주주의(Polity Score)를 활용하여 측정된다.[74] Polity5 데이터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에서 10점으로 측정되며, -10점은 완전한 권위주의(hereditary autocracy), 10점은 완전한 민주주의(consolidated democracy) 국가임을 의미한다.

나. 피후견국 - 잠재적 공격국 양자적 특성에 관한 변수

(1) 선호 유사성

두 국가 사이에 선호가 유사한 정도는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국가의 외교정책이 유사할수록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

유엔 총회 투표 데이터(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를 통해 국가 간의 선호 유사성을 측정한다.[75] 선호 유사성 점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국가의 외교정책이 일치하고, -1에 가까울수록 외교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

(2) 경제 의존도

자주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에는 안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으며, 그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강력한 동인으로 국가의 군사력 사용에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안보 영역에서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국가들이라도 경제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장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이다.[76] 특히 무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놓여 있고 공통의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강화될수록 초국가적인 결합이 심화되어 평화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군사충돌에 있어 경제적 상호의존은 국가로 하

---

74) Center for Systemic Peace, Polity5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8, https://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검색일: 2021.11.16.)

75) Voeten, Erik; Strezhnev, Anton; Bailey, Michael, 200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 https://doi.org/10.7910/DVN/LEJUQZ,(검색일: 2021.11.16.) Harvard Dataverse, V28, UNF:6

76)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1989.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1989)

여금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합력을 가한다. 이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 군사충돌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도 연구되어져 왔다.[77]

국가 간의 경제 의존도는 해당년도에 두 국가 사이의 무역양이 잠재적 공격국의 모든 무역량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작화한다. 이 변수의 값은 0 과 1 사이에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두 국가 간의 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의미한다.

COW 데이터의 Trade(v4.0)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국가 사이의 양자무역량을 통해 경제의존도를 측정한다.

(3) 국력비

국가 간의 국력 차이가 높을수록 잠재적 공격국은 군사충돌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계산할 때 군사충돌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군사충돌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 공격국의 국력이 잠재적 공격국과 피후견국의 총 국력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두 국가의 국력 차이를 보여준다. 이 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피후견국에 비해 잠재적 공격국이 강하다고 의미한다.

앞에 국력 변수와 같이 COW 프로젝트의 국가물질능력 데이터셋에 기록된 국가역량종합지표를 사용한다.[78]

(4) 방위동맹 여부

두 국가가 방위동맹일 경우 군사충돌을 벌일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맹국 사이에 군사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79]

---

77) Solomon William Polachek,“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 No.1, (Mar. 1980), pp.55-78

78) David Singer J.,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1972,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1972), pp.19-48; David. Singer, J., 1987,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14: 115-32.

79) Morrow, James. 2000. Alliances: Why write them dow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63-83. Kimball, Anessa L. 2006. Alliance formation and conflict initiation: The missing link. Journal of Peace Research 43 (4): 371-89.

본 연구는 방위동맹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ATOP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도록 한다.

(5) 안정기(Peaceyears)

두 국가 사이에 얼마 동안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는지가 현재 군사충돌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최근에 군사충돌을 벌였는지 여부가 현재 군사충돌을 벌일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지표가 된다. 이전의 행위는 국가 간의 갈등, 경쟁성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군사충돌 이후의 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시간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80] 이 변수를 조작화하기 위해 MIDs 데이터를 활용한다.

(6) 지리적 인접성

기존 연구에서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더 많은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81] 지리적으로 인접하면 더 많은 접촉이 생기게 되고, 접촉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OW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국가가 인접 국가이라면 1, 아니면 0의 값을 매김으로써 이 변수가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다. 국제 체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

(1) 냉전의 종식

국제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온 냉전의 종식은 국가들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갈등이 심했고 국제 안보 환경이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놓여있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국제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국가 간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아진다.

---

80) Carter, David, and Curtis S. Signorino. 2010. "Back to the Future: Modeling Time Dependence in Binary Data." Political Analysis 18(3): 271-92

81) Bremer, Stuart. 1992. Dangerous dyads: Condition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interstate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 (2): 309-41.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냉전기는 0, 탈냉전기는 1의 값으로 변수를 설정한다.

## 제 2 절 분석 모형

본 연구는 피후견국 내 확장억제 자산 철수 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다른 시기에 비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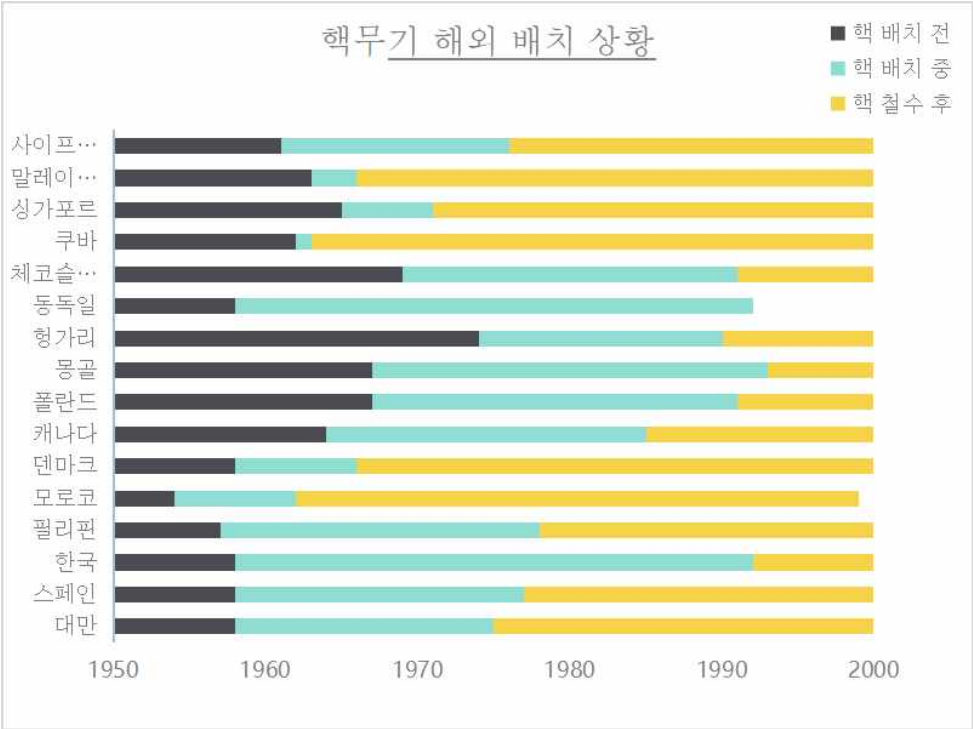
관측치 잔차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통제하기 위해 다이애드를 기준으로 클러스터(cluster)를 적용하여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산출한다.

## 제 3 절 분석 결과

(1) 핵무기와 동맹의 억제효과 검증

먼저 모든 정치적으로 관련된 다이애드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해외배치 핵무기와 동맹조약의 통계 결과를 살펴본다. 핵철수의 경우 해외 배치된 핵무기의 철수 상황은 <그림 Ⅳ-1>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Ⅳ-1>




出處: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Nuclear Strategy, Nonproliferation, and the Causes of Foreign Nuclear Deploymen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3 (2014a), p. 466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Ⅳ-1>의 가로축은 년도를, 세로축은 피후견국을 나타낸다. 피후견국에 핵무기가 배치되기 전에는 검은색으로,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파란색으로, 철수된 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위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피후견국으로 나타난 국가들의 1/3 이상의 경우 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1991년 냉전 종식 전후의 시점에 철수되었다. 특히 소련의 해외 핵무기는 쿠바를 제외하고 모두 1991년 전후에 철수하였다. 때문에 핵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변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 Ⅳ-2> 모형(1)은 핵무기에 관한 로짓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Ⅳ-2> 핵무기와 동맹조약 관련 로짓 분석 결과

|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 | | | | Mid=1 |
| 잠재적 공격국 | 핵무기 배치 | -0.196 | | -0.074 |
| | | (0.334) | | (0.349) |
| | 핵무기 신규 배치(3년) | -0.228 | | -0.210 |
| | | (0.786) | | (0.789) |
| | 핵무기 철수(3년) | 0.273 | | 0.617 |
| | | (0.996) | | (1.037) |
| | 국력 | 1.039 | 1.330 | 1.247 |
| | | (2.532) | (2.760) | (2.809) |
| | 민주주의 | -0.029* | -0.027 | -0.026 |
| | | (0.015) | (0.015) | (0.015) |
| | 동맹 역량a | | -0.537 | -0.348 |
| | | | (3.519) | (3.661) |
| | 동맹 역량b | | -2.403 | -2.445 |
| | | | (2.548) | (2.535) |
| | 신규 동맹 역량a | | -37.990 | -36.860 |
| | | | (54.710) | (53.500) |
| | 신규 동맹 역량b | | -48.420 | -49.680 |
| | | | (43.812) | (44.041) |
| | 동맹 역량 감소a | | -17.940 | -18.450 |
| | | | (15.700) | (16.083) |
| | 동맹 역량 감소b | | -229.900 | -234.700 |
| | | | (166.367) | (171.137) |
| 피후견국 | 핵무기 배치 | -0.099 | | -0.007 |
| | | (0.327) | | (0.345) |
| | 핵무기 신규 배치(3년) | 0.281 | | 0.311 |
| | | (0.571) | | (0.567) |

| | | | | |
|---|---|---|---|---|
| | 핵무기 철수(3년) | 0.408 | | 0.689 |
| | | (0.759) | | (0.785) |
| | 국력 | 7.092*** | 7.455*** | 7.481*** |
| | | (2.036) | (1.981) | (2.077) |
| | 민주주의 | 0.026 | 0.029 | 0.028 |
| | | (0.016) | (0.016) | (0.017) |
| | 동맹 역량a | | -3.057 | -3.104 |
| | | | (4.492) | (4.752) |
| | 동맹 역량b | | 0.468 | 0.458 |
| | | | (2.035) | (1.991) |
| | 신규 동맹 역량a | | 16.020 | 16.290 |
| | | | (21.279) | (21.489) |
| | 신규 동맹 역량b | | -7.486 | -8.366 |
| | | | (6.778) | (7.709) |
| | 동맹 역량 감소a | | -226.600 | -231.000 |
| | | | (204.125) | (197.516) |
| | 동맹 역량 감소b | | -12.000 | -11.790 |
| | | | (24.446) | (24.653) |
| 양자적 특성 | 국력비 | 0.901* | 0.849* | 0.861* |
| | | (0.386) | (0.371) | (0.389) |
| | 지리적 인접성 | 2.437*** | 2.565*** | 2.557*** |
| | | (0.293) | (0.285) | (0.298) |
| | 선호 유사성 | -0.907*** | -0.918*** | -0.918*** |
| | | (0.174) | (0.180) | (0.179) |
| | 방위동맹 | -0.137 | -0.053 | -0.055 |
| | | (0.242) | (0.270) | (0.277) |
| | 경제 의존도 | 0.831 | 1.306 | 1.303 |
| | | (2.287) | (2.320) | (2.345) |
| | 안정기 | -0.017* | -0.017* | -0.017* |
| | | (0.007) | (0.007) | (0.007) |
| 국제 체제적 특성 | 냉전 종식 | 0.269 | 0.296 | 0.301 |
| | | (0.217) | (0.243) | (0.247) |

| | | | | |
|---|---|---|---|---|
| | 상수 | -6.245*** | 6.274*** | -6.275*** |
| | | (0.339) | (0.328) | (0.345) |
| | | | | |
| | | | | Mid=2 |
| 잠재적 공격국 | 핵무기 배치 | -0.045 | | 0.203 |
| | | (0.315) | | (0.348) |
| | 핵무기 신규 배치(3년) | 0.350 | | 0.426 |
| | | (0.544) | | (0.540) |
| | 핵무기 철수(3년) | -0.689 | | -0.404 |
| | | (1.044) | | (1.043) |
| | 국력 | 7.766*** | 8.154*** | 8.507*** |
| | | (2.224) | (2.036) | (2.130) |
| | 민주주의 | 0.024 | 0.031* | 0.029 |
| | | (0.015) | (0.016) | (0.017) |
| | 동맹 역량a | | -7.938* | -8.588 |
| | | | (4.044) | (4.505) |
| | 동맹 역량b | | 0.361 | 0.317 |
| | | | (1.996) | (1.914) |
| | 신규 동맹 역량a | | 26.360 | 27.060 |
| | | | (19.217) | (19.280) |
| | 신규 동맹 역량b | | -5.551 | -4.876 |
| | | | (6.583) | (6.358) |
| | 동맹 역량 감소a | | -229.9 | -228.2 |
| | | | (219.270) | (221.572) |
| | 동맹 역량 감소b | | -8.935 | -9.041 |
| | | | (19.695) | (19.107) |
| 피후견국 | 핵무기 배치 | -0.261 | | -0.032 |
| | | (0.331) | | (0.344) |
| | 핵무기 신규 배치(3년) | -0.091 | | -0.019 |
| | | (0.784) | | (0.797) |
| | 핵무기 | -12.920*** | | -13.230*** |

| | | | | |
|---|---|---|---|---|
| | 철수(3년) | | | |
| | | (0.212) | | (0.225) |
| | 국력 | 0.335 | 1.197 | 1.115 |
| | | (2.693) | (2.777) | (2.833) |
| | 민주주의 | -0.031* | -0.027 | -0.026 |
| | | (0.014) | (0.014) | (0.015) |
| | 동맹 역량a | | -3.580 | -3.586 |
| | | | (3.110) | (3.229) |
| | 동맹 역량b | | -2.952 | -2.933 |
| | | | (2.801) | (2.747) |
| | 신규 적극적 동맹 | | -21.870 | -22.420 |
| | | | (44.489) | (43.434) |
| | 신규 동맹 역량b | | -31.260 | -28.220 |
| | | | (27.524) | (26.938) |
| | 동맹 역량 감소a | | -14.180 | -12.800 |
| | | | (13.547) | (12.706) |
| | 동맹 역량 감소b | | -254.800 | -248.800 |
| | | | (192.835) | (185.781) |
| 양자적 특성 | 국력비 | -1.081** | -0.995* | -1.052* |
| | | (0.408) | (0.400) | (0.419) |
| | 지리적 인접성 | 2.485*** | 2.708*** | 2.719*** |
| | | (0.295) | (0.309) | (0.322) |
| | 선호 유사성 | -0.898*** | -0.941*** | -0.934*** |
| | | (0.178) | (0.186) | (0.186) |
| | 방위동맹 | -0.129 | 0.112 | 0.124 |
| | | (0.240) | (0.235) | (0.240) |
| | 경제 의존도 | -0.205 | 1.115 | 1.126 |
| | | (2.137) | (1.953) | (2.009) |
| | 안정기 | 0.005 | 0.006 | 0.006 |
| | | (0.006) | (0.007) | (0.007) |
| 국제 체제적 특성 | 냉전 종식 | -0.090 | -0.140 | -0.134 |
| | | (0.189) | (0.194) | (0.196) |
| | 상수 | -5.541*** | -5.690*** | -5.688*** |

| | | | | |
|---|---|---|---|---|
| | | (0.346) | (0.347) | (0.361) |
| | | | | |
| | | | | Mid=3 |
| 잠재적 공격국 | 핵무기 배치 | -0.131 | | 0.114 |
| | | (0.459) | | (0.483) |
| | 핵무기 신규 배치(3년) | -0.761 | | -0.737 |
| | | (1.100) | | (1.098) |
| | 핵무기 철수(3년) | -0.419 | | -0.167 |
| | | (0.770) | | (0.822) |
| | 국력 | 0.762 | 0.844 | 0.875 |
| | | (2.594) | (2.589) | (2.595) |
| | 민주주의 | 0.004 | 0.011 | 0.011 |
| | | (0.017) | (0.018) | (0.018) |
| | 동맹 역량a | | -11.300** | -11.440** |
| | | | (4.211) | (4.343) |
| | 동맹 역량b | | 1.207 | 1.198 |
| | | | (1.816) | (1.836) |
| | 신규 동맹 역량a | | 4.583 | 5.114 |
| | | | (15.026) | (14.894) |
| | 신규 동맹 역량b | | -11.390 | -11.270 |
| | | | (6.495) | (6.417) |
| | 동맹 역량 감소a | | -117.500 | -117.400 |
| | | | (86.106) | (86.794) |
| | 동맹 역량 감소b | | 13.170* | 13.120* |
| | | | (5.825) | (5.780) |
| 피후견국 | 핵무기 배치 | -0.265 | | -0.038 |
| | | (0.441) | | (0.454) |
| | 핵무기 신규 배치(3년) | -0.226 | | -0.198 |
| | | (0.780) | | (0.784) |
| | 핵무기 | -1.243 | | -1.017 |

| | | | | |
|---|---|---|---|---|
| | 철수(3년) | | | |
| | | (0.991) | | (1.095) |
| | 국력 | 0.620 | 1.223 | 1.186 |
| | | (2.525) | (2.499) | (2.487) |
| | 민주주의 | -0.0001 | 0.005 | 0.006 |
| | | (0.017) | (0.017) | (0.017) |
| | 동맹 역량a | | -11.650** | -11.570** |
| | | | (4.372) | (4.487) |
| | 동맹 역량b | | 2.229 | 2.278 |
| | | | (2.139) | (2.151) |
| | 신규 적극적 동맹 | | 2.320 | 1.990 |
| | | | (15.609) | (15.546) |
| | 신규 동맹 역량b | | -9.907 | -9.754 |
| | | | (5.705) | (5.624) |
| | 동맹 역량 감소a | | -98.160 | -92.810 |
| | | | (69.828) | (70.863) |
| | 동맹 역량 감소b | | 12.780* | 12.660* |
| | | | (5.708) | (5.659) |
| 양자적 특성 | 국력비 | -0.126 | -0.121 | -0.138 |
| | | (0.424) | (0.411) | (0.425) |
| | 지리적 인접성 | 3.890*** | 4.044*** | 4.057*** |
| | | (0.326) | (0.348) | (0.345) |
| | 선호 유사성 | -0.630** | -0.787*** | -0.799*** |
| | | (0.242) | (0.234) | (0.235) |
| | 방위동맹 | -0.355 | 0.101 | 0.102 |
| | | (0.223) | (0.214) | (0.226) |
| | 경제 의존도 | -7.936* | -6.848* | -6.852* |
| | | (3.254) | (3.012) | (3.044) |
| | 안정기 | -0.0547*** | -0.0537*** | -0.0540*** |
| | | (0.009) | (0.009) | (0.009) |
| 국제 체제적 특성 | 냉전 종식 | 0.411 | 0.262 | 0.258 |
| | | (0.221) | (0.245) | (0.251) |
| | 상수 | -5.647*** | -5.711*** | -5.702*** |

| | | | | |
|---|---|---|---|---|
| | | (0.497) | (0.492) | (0.498) |
| | 관측 수 | 82176 | 82176 | 82176 |
| | tstatisticsinparentheses | | | |
| | Prob > chi2 = 0.0000*** | | | |
| | *p<0.05,**p<0.01,***p<0.001 | | | |

전체적으로, 모형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이 연구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분석 결과는 연구의 핵심 가설 일부분만 지지한다.

핵무기의 배치 변수는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다. 핵무기의 철수 변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상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0.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한 후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주장한 바와 같이 도덕적 해이로 해석할 수 있다. 양국이 이익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라는 보험을 가진 피후견국은 보험이 없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할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핵무기가 철수한다면 피후견국의 공격적 행동이 억제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핵무기의 철수는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하더라도 피후견국은 핵보유국인 후견국과 방위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맹약속은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2)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대한 동맹조약과 관련된 각 변수의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연구의 핵심 가설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공수동맹 역량은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후견국의 공수동맹이 많을수록, 공수동맹국이 강할수록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 동시에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이는 일반 확장억제에 있어 공수동맹의 효과를 확인해준다.

반면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에 의한 동맹 역량은 피후견국의 안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 조약의 종료는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맹국과의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이 종료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있어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의 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비록 공수동맹과 달리 위기 시 피후견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의 종료는 동맹국의 입장이나 적대국의 인식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피후견국의 안보에 있어 핵무기와 동맹조약의 영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모형(3)은 피후견국과 잠재적 공격국의 핵무기 배치에 관한 변수와 동맹조약에 관한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모형(1)과 모형(2)에서 핵무기 관련 변수와 동맹조약 관련 변수의 통계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공수동맹 역량 변수는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할 가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0.05의 유의수준을 근소한 차이로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한 통제변수들 중 일부만 본 연구의 예측 방향과 일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먼저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모두 피후견국의 안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국력은 모형(1), 모형(2), 그리고 모형(3)에서 모두 피후견국이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국력이 강할수록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국력이 강한 국가는 위협이나 도발에 대처할 때 이익을 양보하지 않거나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태도로 갈등을 군사적 충돌로 발전시킬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 변수는 각 모형에서 다른 통계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형(1)에서  민주주의는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 정도가 높을수록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이는 민주주의가 군사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평화론의 주장이 확인되었다. 반면 모형(2)에서 민주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할 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민주주의와 군사충돌을 연결시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후견국과 잠재적 공격국의 양자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모형(1), 모형(2), 그리고 모형(3)에서 모두 본 연구에 예측 방향과 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피후견국과 잠재적 공격국의 방위동맹 여부는 군사충돌의 가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동맹국 사이에 더 많은 접촉 때문에 오히려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동맹관계의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은 서로 다른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공격국과 피후견국의 국력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잠재적 공격국이 피후견국에 비해 국력이 강할수록 군사충돌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사충돌을 일으킬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준다.

선호 유사성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 간 외교 정책에 있어 유사할수록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

지리적 인접성은 모든 모형에서 군사충돌 발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보다 많은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경제 의존도는 군사충돌 발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 사이에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군사충돌에 휘말리는 가능성이 낮다. 이는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분쟁을 군사적 충돌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할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 의존도는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키거나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어떤 정치 목

적 달성을 위하여 적대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고려할 때 경제 의존도는 우선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다시 말해, 경제 의존도는 국가 간 저강도 분쟁을 군사적 충돌로 발전시키지 않는 데 효과적이다.

안정기 변수는 군사충돌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된다. 국가 사이에 군사충돌이 일어난 지 오래 될수록 국가가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반면 국제 체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인 냉전의 종식은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군 주둔의 억제효과 검증

다음으로 미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군이 주둔하였던 국가만을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 <표 Ⅳ-3>는 미국의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통제변수가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는 모형(1)에서 국력, 민주주의, 지리적 인접성, 선호 유사성, 안정기는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력비, 경제 의존도와 냉전의 종식 변수는 핵무기와 동맹조약 데이터와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국력비는 군사충돌 발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 사이에 상대방에 비해 국력이 강할수록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의존도는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국가 사이에 경제 의존도가 높을수록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살펴본<표 Ⅴ-2>에서 경제 의존도가 국가 간 저강도 분쟁을 군사적 충돌로 발전시키지 않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과는 대조된다.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사이에 더 많은 접촉이나 다른 문제로 오히려 군사충돌이 일으킬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 의존도가 높으며 영토, 혹은 역사 등의 문제로 인해 군사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냉전의 종식은 모든 정치적으로 관련된 다이애드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와 동맹조약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만 분석 대상으로 한정할 때, 냉전의 종식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미국의 피후견국들은 냉전기에 비해 탈 냉전기에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냉전기에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이나 우방국 사이의 분쟁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의 피후견국들은 공세성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군 감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모형(2)를 살펴본다. 통제변수는 방향과 통계적 유의미성이 모두 모형(1)와 같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있어 미군 감축 상황에서도 통제변수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고 확인된다.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공격국은 미군 감축을 피후견국을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비록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더라도 확장억제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미국은 피후견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적대국의 위협이나 공격을 억제한다. 미군 감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을 적대국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철군하는 동시에 피후견국에 상당한 군사지원이나 경제지원을 제공하거나 피후견국 자체의 군사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미군 감축은 곧 피후견국의 군사력의 약화, 더 나아가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둘째, 미군 감축이 미군의 완전한 철수와 거리가 멀다. 피후견국에 남아있는 미군은 여전히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군의 주둔은 피후견국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계철선의 역할로 위기 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더라도 미군 철수 이전에 미국이 피후견국에 대해 수행하던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국의 개입을 두

려워하는 잠재적 공격국은 미군이 일부분 철수하더라도 피후견국을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표 V-3>미군 감축에 관한 로짓 분석 결과

| | | 모형(1) | 모형(2) |
|---|---|---|---|
| | | | Mid=1 |
| 잠재적 공격국 | 미군 감축 | | -0.461 |
| | | | (0.322) |
| | 국력 | 5.353 | 4.946 |
| | | (5.579) | (5.569) |
| | 민주주의 | -0.065*** | -0.065*** |
| | | (0.015) | (0.015) |
| 피후견국 | 미군 감축 | | 0.237 |
| | | | (0.333) |
| | 국력 | 11.725* | 12.136* |
| | | (4.824) | (4.806) |
| | 민주주의 | 0.009 | 0.008 |
| | | (0.026) | (0.026) |
| 양자적 특성 | 국력비 | 0.640 | 0.730 |
| | | (0.568) | (0.582) |
| | 지리적 인접성 | 2.968*** | 2.965*** |
| | | (0.352) | (0.353) |
| | 선호 유사성 | -0.488 | -0.487 |
| | | (0.370) | (0.369) |
| | 방위동맹 | -0.502 | -0.497 |
| | | (0.387) | (0.387) |
| | 경제 의존도 | 5.525** | 5.549** |
| | | (1.920) | (1.927) |
| | 안정기 | -0.013 | -0.013 |
| | | (0.010) | (0.010) |
| 국제 체제적 특성 | 냉전 종식 | 0.826* | 0.831* |
| | | (0.379) | (0.393) |
| | 상수 | -6.312*** | -6.346*** |
| | | (0.552) | (0.560) |
| | | | |
| | | | Mid=2 |
| 잠재적 공격국 | 미군 감축 | | 0.504 |
| | | | (0.282) |

| | | | |
|---|---|---|---|
| | 국력 | 11.494* | 11.939* |
| | | (4.913) | (4.897) |
| | 민주주의 | 0.014 | 0.014 |
| | | (0.025) | (0.025) |
| 피후견국 | 미군 감축 | | -0.181 |
| | | | (0.432) |
| | 국력 | 3.869 | 3.453 |
| | | (5.736) | (5.752) |
| | 민주주의 | -0.064*** | -0.063*** |
| | | (0.013) | (0.013) |
| 양자적 특성 | 국력비 | -0.709 | -0.789 |
| | | (0.618) | (0.629) |
| | 지리적 인접성 | 2.889*** | 2.877*** |
| | | (0.352) | (0.352) |
| | 선호 유사성 | -0.672 | -0.687 |
| | | (0.388) | (0.387) |
| | 방위동맹 | -0.333 | -0.326 |
| | | (0.438) | (0.436) |
| | 경제 의존도 | 4.956** | 4.983** |
| | | (1.850) | (1.856) |
| | 안정기 | 0.017 | 0.018 |
| | | (0.011) | (0.011) |
| 국제 체제적 특성 | 냉전 종식 | 0.190 | 0.173 |
| | | (0.310) | (0.311) |
| | 상수 | -6.086*** | -6.074*** |
| | | (0.416) | (0.433) |
| | | | |
| | | | Mid=3 |
| 잠재적 공격국 | 미군 감축 | | 0.372 |
| | | | (0.285) |
| | 국력 | -7.158 | -7.352 |
| | | (6.845) | (6.742) |
| | 민주주의 | -0.024 | -0.024 |
| | | (0.021) | (0.021) |
| 피후견국 | 미군 감축 | | 0.373 |
| | | | (0.289) |
| | 국력 | -8.124 | -8.286 |
| | | (6.682) | (6.576) |
| | 민주주의 | -0.035 | -0.035 |

| | | | |
|---|---|---|---|
| | | (0.021) | (0.021) |
| 양자적 특성 | 국력비 | -0.066 | -0.064 |
| | | (0.542) | (0.528) |
| | 지리적 인접성 | 3.860*** | 3.857*** |
| | | (0.388) | (0.895) |
| | 선호 유사성 | -0.589* | -0.619* |
| | | (0.321) | (0.314) |
| | 방위동맹 | -0.638 | -0.635 |
| | | (0.364) | (0.363) |
| | 경제 의존도 | -5.938 | -5.870 |
| | | (4.452) | (4.448) |
| | 안정기 | -0.054*** | -0.053*** |
| | | (0.015) | (0.015) |
| 국제 체제적 특성 | 냉전 종식 | 0.705* | 0.645* |
| | | (0.306) | (0.314) |
| | 상수 | -4.845*** | -4.886*** |
| | | (0.665) | (0.666) |
| | 관측 수 | 42265 | 42265 |
| | tstatisticsinparentheses | | |
| | Prob > chi2 = 0.0000 | | |
| | *p<0.05,**p<0.01,***p<0.001 | | |

본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명시하고 변수를 설정한 뒤, 다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일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확인되었다. 핵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수동맹이 있을 경우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하거나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이는 일반 확장억제에 있어 공수동맹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동맹국과의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이 종료된다면 피후견국은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있어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바이다.

둘째,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했을 때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진다. 한편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계속 배치할 필요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피후견국이 핵보유국과 방위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피후견국에 핵무기 배치는 확장억제 효과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는 없다.[82] 본 연구 역시 핵무기의 철수가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잠재적 공격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데에 있어 피후견국이 후견국과 방위동맹일 경우 핵무기의 배치나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안보 상황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후견국 측 군사력과 위기 시 피후견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의지가 미군 감축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본 연구에 주장한 바와 다른 상황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82) Fuhrmann and Sechser, 2014a. p920.

# 제 5 장 사례 연구

본 장에서는 한국에 주목하여 다른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가 한국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945년 9월 15일부터 미군 6,7,40 사단 7만 2천명이 일본군 점령해제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미군은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잔류시키고 완전히 철수하였다.[83]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군이 다시 한반도로 진주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를 계속 주둔하였고 동시에 한국과 방위동맹을 맺었다.[84] 주한미군은 인계철선(tripwire) 역할로 하며 만약에 북한이 다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보장해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었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공식적으로 밝혀졌다.[85] 핵무기의 경우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1958년에 한반도에 배치하였고 1991년에 완전히 철수하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크게 6 차례의 철군을 단행하였다. 첫 번째는 1948-49년에 미군 군사고단 500명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한 완전 철군이다. 두 번째 철군은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에 참여하였던 미군 중 7만 명 정도를 남겨놓고 25만 명을 철수한 것이다. 세 번째 철군은 1970년쯤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 제 7사단이 철수된 것이다. 네 번째는 1977년 카터 대통령의 완전 철군 계획에 의해 일부 철군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는 1990-92년 미국의 신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따른 3단계 철군이다. 여섯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군 12500명을 철수한 것이다. <그림 V-1>는 1950-2000년 사이에 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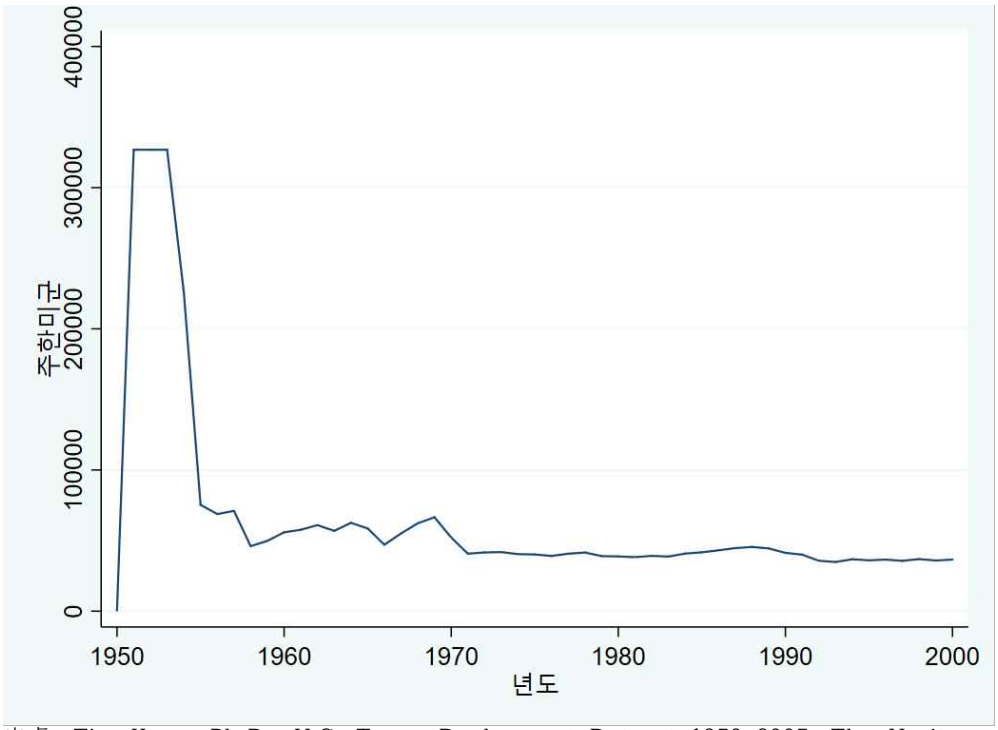
83) 하영선, 1983. "한미군사관계: 지속과 변화," 구영록(외), 『한국과 미국: 100년과 그 이후』(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3), pp.191-92.

84)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kor001.asp (검색일: 2021.11.19).

85)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kor001.asp (검색일: 2021.11.19).

미군의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86]

<그림 V-1> 1950-2000년간 주한미군 변화




出處: Tim Kane, Ph.D., U.S. Troop Deployment Dataset 1950-2005, The Heritage Foundation, based on annual records from Department of Defense, DIOR.를 참고하여 정리함.

본 장은 분석 대상을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 철수로, 연구 범위를 확장억제 자산을 철수하기 전후 5년 사이로 정하고 핵무기나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른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를 파악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한미 방위동맹 체제가 한국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절에서는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왜 한국을 정하였는지를 설명한다.

86)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으며 1953년 전쟁이 끝나면서 주한미군 2개 사단 7만 명을 잔류시키고 1955년까지 약 25만 명을 철수하였다. 이만큼 전쟁의 종료에 따른 감축 규모는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비하여 다른 미군 재조정의 양상은 분명하지 못하다.

이에 학문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주한미군의 두 차례 철수에 따른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를 비교한다. 3절에서는 1991년 미국이 한국에서의 모든 핵무기를 철수한 후 한국의 안보상황의 변화를 살펴보고 결론을 제시한다.

본 사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앞에서 제시한 가설과 분석 결과를 실제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여 연쇄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보충한다. 통계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확률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나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정량적 분석의 결과는 사례 연구 방법과 병행 사용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입증되고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사례 분석으로 추가 검증을 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이 더욱 확신될 수 있고 설명력을 보장할 수 있다.

## 제 1 절 사례 선정의 이유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의 목적은 이론을 역사적 사례에 적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풍부하게 설명하는 데에 있다. 한국은 이를 충족시키는 사례다. 주한미군 병력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경중에 따라 조정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즉 한반도의 안보 전략적 중요성이 클 경우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역시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주한미군은 재조정의 대상이 되어왔다.[87] 같은 의미로 핵무기 철수도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은 여러 차례 철수를 경험하였다. 그 중에서 주한미군 1차 철수와 3차 철수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한미군 1차 철수는 1947년 말부터 시작하였고 1949년까지 주한미군 45000명을 모두 철수하였다.[88] 1947년

87) 이상현, and 조윤영. 2004. p169.
88) Chay, J. 1990. *Diplomacy of Asymmetry: Korean American Relations to 191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118.

에 베를린 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부는 유럽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또한 한국군이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북한을 억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89]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50년에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한국의 안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주한미군 3차 철수는 한미동맹체제가 공고화된 후 첫 철수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는 동시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다. 주한미군은 인계철선 역할로 하며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미군의 철수가 한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정세와 미국의 입지를 어떻게 인식시키는지를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를 통해 밝힐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 3차 철수는 1970년 3월에 철군 결정을 내렸고 그해 6월에 한국정부에 전달되었으며 1971년 중순에 철군이 완료되었다.[90] 철수 결정을 내리는 시점부터 철수가 끝나는 시점까지 1년 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철수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주한미군 3차 철수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2개 사단 중 1개 사단, 즉 전체 병력의 약 1/3에 해당하는 병력이 감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은 미군은 거의 모두 북한의 포병 범위 밖으로 이동시켰고 이는 북한이 공격할 때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다. 따라서 소규모 철군에 비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기대 가능하다.

한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현실적 이유는 다른 사례들에 비하여 자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

89) Schnabel, F.J. 1992.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30. Kim Jung-Ik. 1996.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Military Relationship*. London: Macmillan. p10.

90) U.S. Department of State. 200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19, Part 1: Korea, 1969-197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 (검색일:2021.11.20.) pp.148-50.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을 한국에 배치해 왔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와 관련된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 제 2 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

### 1. 주한미군 1차 철수의 배경과 한국전쟁

19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선언되면서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은 구체화되었다. 봉쇄전략은 유럽에 중심을 두면서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주한미군 1차 철수의 결정은 바로 미소 냉전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미국 세계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단행하였다. 당시 미국에 있어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가 낮다는 판단에 기초하였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급속한 군사력 감축으로 소련의 전면적 공격을 한국에서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91] 미국 정부는 트루먼 독트린으로 본격화된 대소봉쇄전략 수행에서 제한된 군사력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48년에 들어 미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을 지었다.[92] 철수를 보완하는 조치로써 미국은 북한의 공공연한 공격행위를 제외한 다른 도발행위에 대비한 적절한 무장 세력을 건설하고 내부 전복에 취약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주한미군 철수는 1948년 10월에 여순반란 사건 등 한국 국내 불안으로 잠시 지연되었으나 12월 12일에 유엔에서의 한국 승인과 25일에 소

---

91) Samuel Huntington, *The Common Defense: Strategic Programs in National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61), pp.33-34.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Kennan)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Butterworth), September 24, 1947, FRUS 1947, Vol. VI, p.814.

92) NSC 8,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FRUS 1948, Vol. VI: The Far East and Australia, p.1168.

련군의 북한에서의 철수 발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1945년 9월에 한국에 진주한 미군은 1949년 6월 말까지 군사고문단 500명만 잔류시키고 완전히 철수하였다.[93]

미군의 한국 진주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급격한 군사력 감축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였다. 대소봉쇄전략이 확고히 정해지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됨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낮게 평가되었다. 미국은 한국 방위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 군사적 동맹조약을 맺지 않았고 정치적, 경제적 공약을 통해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 하였다. 그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군사전략적이기보다는 순전히 정치적 후견자로 기능했었다.[94] 따라서 미국은 군사고문단 500명을 제외한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된 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1953년에 한국전쟁은 종전이나 평화가 아니라 '휴전'으로 끝났다. 휴전을 논의하는 초기에 한국정부는 이에 반대하였다. 1953년 4월 22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휴전반대와 단독북진 의사를 표명하였다.[95] 미국은 한국정부를 휴전에 협력시키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미국이 한국방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를 휴전에 협력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 경제원조와 안보조약을 제공하는 등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간주하였다.[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국은 주한미군을 한강 이북에 배치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방위체제의 변화를 초래한 배경은 1969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이었

---

93) 하영선, 1983. pp.191-92.

94) 강성학. 2003.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 / 강성학 편저*. p.206.

95) "Aide-Memoire," April 22, 1953, in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obertson)," April 24, 1953,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1, p.935.

96)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Elizabeth A. Brown of the Office of United Nations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August 1, 1953. FRUS, 1952-1954, XV, Korea, Part2, pp.1460-1466.

다.

## 2. 주한미군 3차 철수의 배경과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

1969년 7월 25월 미국 대통령 닉슨은 괌에서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인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하였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물론 동맹국과의 조약상 약속은 계속 지키겠지만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적 행동을 취하라는 취지였다.[97] 다시 말해, 닉슨 독트린의 핵심은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 본토에서 발생 가능한 전쟁에서 미 지상군의 개입을 피하기 위함에 있다. 게다가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었다.[98] 이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에 걱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닉슨 행정부 군사 고문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의 시점을 정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닉슨 독트린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닉슨독트린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부합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지적하였다.[99]

그러나 이 시기에 한국의 안보상황을 보면 결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북한의 도발 행위는 비무장지대(DMZ)에 고조되는 추세였다. 1966년까지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안보 대세이었는데 1967-68년 사이에 북한이 육상과 해상으로 한국에 침투한 행동 때문에 사상자가 급증하였다. 통계에 따라 1965-66년에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매년 40건 정도였으나 1967년과 1968년에는 각각 445건,

---

9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Nixon, 1969 (Washington: 1971).

98) Joo-hong Nam, *America'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 First Decade of the Nixon Doctr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64.

99) U.S. Congress. 1978.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60.

54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100]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68년 1월 21일에 서울로 특공대를 파견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1969년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위기 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항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4월 15일에 미 해군 EC-121 정찰기는 동해상에서 북한 공군 소속 MiG-21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미국 승문원 31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 정찰 역사상 최악의 손실'로 기록되고 있다.[101] 이에 대해 닉슨 행정부는 사건 직후인 15일과 16일 안보관련 회의를 열어 다양한 군사보복 옵션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반격에 따른 긴장고조 또는 전면전 발발 가능성, 군사행동이 베트남전쟁에 미칠 영향,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군사보복을 포기하였다.[102]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수단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건들과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실패는 모두 한미방위공약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기재 기록에 따르면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말까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명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103] 이 결정에 대해 한국 측엔 한국군의

---

100) Report,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 the United Nations, NSC Senior Review Group Meetings, H-035, NSC Institutional Files,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NPL).

101) US Government, US Military, Department of Defence, US Navy and National Security Agency, 2015. A Dangerous Business: The U.S. Navy and National Reconnaissance during the Cold War (Washington: Progressive Management 2015), p9.

10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North Korean Shootdown of a U.S. Reconnaissance Flight and Contingency Planning, January-November 1969.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1 (검색일: 2021.11.20)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the EC-121 Shootdown. National Security Agency. https://www.nsa.gov/portals/75/documents/news-features/declassified-documents/cryptologic-histories/EC-121.pdf (검색일: 2021.11.20)

능력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철수는 위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에 따라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한국 국회는 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한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그러한 행동은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04]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105] 포터의 증언에 따라 박 대통령은 철군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표현했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06]

한국 측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도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1969년 국가정보평가특별위원회는 1960년대 후반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표시하였다.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더라도 긴박하고 위험한 안보 태세는 몇 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사건이나 가끔 일어나는 게릴라 작전[107]을 넘어서고자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병력으로 전선을 넘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그해 말 발표된 국가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분의 미군 철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비무장지대에 군사적이

---

103)US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31 October 1978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p61-62.

104) TAYLOR, W. J., SMITH, J. A., & MAZARR, M. J. 1990. US TROOP REDUCTIONS FROM KOREA, 1970-1990.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4(2), 256-286. "Korea: Leave Us the Tools," The Economist, July 25, 1970, p. 29.

105) Oberdorfer. 1999. p13.

106)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p63. Cha. 1999. p66.

107) 게릴라 작전은 적의 배후나 측면을 소규모의 유격대가 기습 공격함으로써 적을 교란시키는 전술로 작전을 한다.

나 준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큰 위험 없이 강화시킬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08]

반면 닉슨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공군의 지원으로 한국이 자신의 방위를 맡을 수 있도록 계획이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철수의 의중을 명확히 표명하였다.[109] 한국의 강력한 저항과 한미 양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은 계획했던 철수 계획을 계속 추진하였다. 동시에 한국군의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하였다.[110]

1971년 2월 한미 양국은 미군 감축과 한국군의 현대화 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111] 1971년 7월 말까지 7사단을 철수했고 서부전선의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한미 양측의 예상과 달리 북한의 도발 행위는 고조되지 않았다. 1971년 1월 한국 여객기 납치 시도 외에 1974년까지 북한은 다른 도발 행위를 취하지 않았다.[112] 1970년대 초 북한의 침공, 비무장지대 혹은 후방지역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미군 과 한국군 사상자가 크게 감소했음이 확인되었다.[113] 구체적으로 한국의 안보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 전후 10년간, 즉 1965년부터 1976년까지 한국의 군사

---

108)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69a. "NIE 42-69: The Outlook in South Korea."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DOC_0001218151.pdf. (검색일: 2021.11.20)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69b. "SNIE 14.2-69: The Confrontation in Korea." http://www.foia.cia.gov/sites/default/files/document_conversions/89801/DOC_000 1218149.pdf. (검색일: 2021.11.20)

109)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Henry A Kissinger, Subject: Review Group Meeting on Korea, February 3, 1970, H-041, NPM.

110) Letter, Nixon to Park, 7 July 1970, FRUS: Korea 196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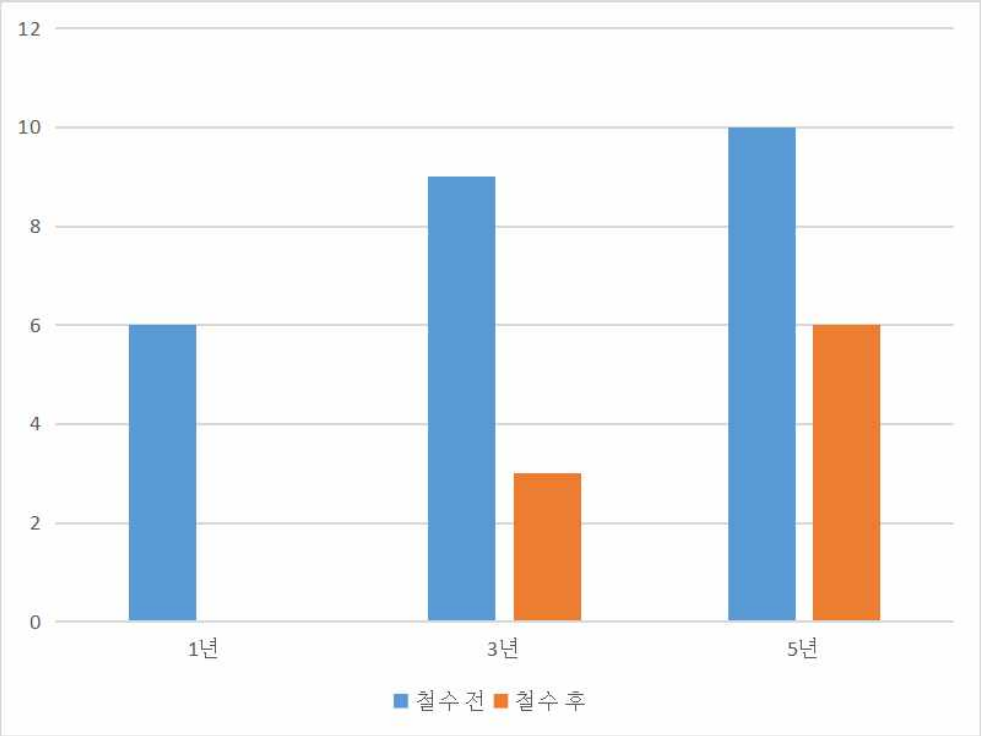
111)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66-68

112) '도발'은 무장침입, 국경침해, 무장 파괴자 혹은 스파이 침투, 납치, 테러(암살, 폭파 포함), 정치지도자, 언론인, 기관 등에 대한 위협 혹은 선동, 대한민국 정부 전복 선동, 중요한 협상에 대한 방해,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등으로 정의한다. Fischer, Hannah. 2007.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6.

113) Cha, 1999. p64.

충돌 발생 빈도를 살펴본다.[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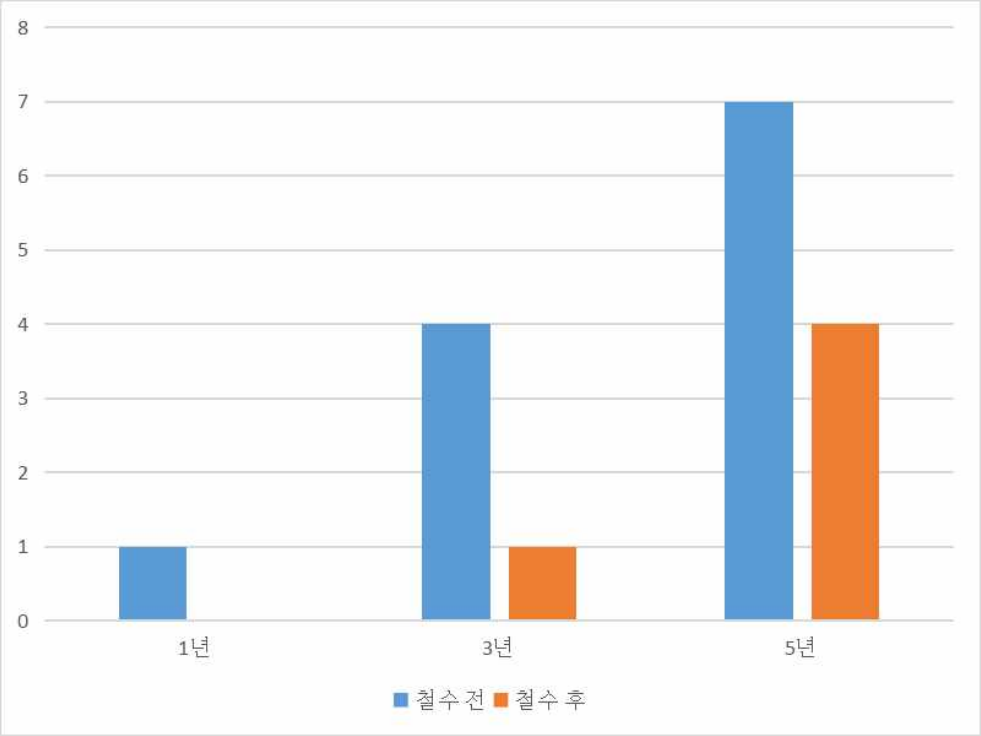
<그림 V-2> 1965-1976년간 북한 도발 행위 빈도




出處: Fischer, Hannah. 2007.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4-7를 참고하고 정리했음.

114) MID 다이애드 데이터에 따라 이 시기 남북한 사이에 일어난 충돌들에 있어 어느 편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러나 다른 시기를 참고하면 모두 북한이 군사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북한을 먼저 공격을 가하는 편으로 가정한다.

<그림 V-3> 1965-1976년간 한국 군사충돌 발생 빈도




出處: Palmer, Glenn, Roseanne W. McManus, Vito D'Orazio, Michael R. Kenwick, Mikaela Karstens, Chase Bloch, Nick Dietrich, Kayla Kahn, Kellan Ritter, Michael J. Soules. 2020. "The MID5 Dataset, 2011-2014: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Working paper. Available at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mid-5-data-and-supporting-materials.zip/view.(검색일: 2021.12.10)

<그림 V-2>는 주한미군 철수 전후 1년간, 3년간, 5년간 북한의 도발 행위 빈도를 보여준다. <그림 V-3>는 같은 시기에 한국이 겪은 군사충돌의 빈도를 보여준다.[115]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비해 철수한 후 북한의 도발 행위와 군사적 공격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사적 측면이나 준군사적 측면에 보면 북한의 공세성이 모두 약해졌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한국 안보상황을 약화

115) 군사충돌은 위와 같이 군사력의 사용이 필수로 정하고 도발 행위는 그렇지 않다. 도발에 대한 정의는 각주 27)에 있다.

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1971-74년 사이에 한국의 안보상황은 안정적인 편이었다.[116]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기로 남북한은 모두 한반도 긴장 완화에 주목한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1971년 8월에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정책은 중대하고 갑작스러운 반전을 보여주었다. 김일성은 북한이 한국과 직접 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빠르게 답례하였고 20일에 적십자 대표단으로 가장한 남북 정보 당국자들의 만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1년 후반과 1972년 초에 일련의 고위급 교류와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1972년 7월 한국 정보부장은 평양에서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고 회담에서 남북적통전화 공식화에 합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 회선이 공식화되었다.[117] 이만큼 남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974년부터 남북한 긴장 대세는 다시 고조되었다. 1974년 8월 15일에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2차 암살을 시도했고 대통령 영부인을 살해하였다. 1976년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118]

주한미군 조정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의 상대적 경중에 따라 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한반도의 안보 전략적 중요성이 클 경우 주한미군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주한미군은 재조정의 대상이 되어왔다.[119]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3차 철수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개선되었다는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계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결정되는 것이었다.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 개입을 피하기 위한 취지였다.

주한미군 3차 철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한국의 안보상황이 안정적이

---

116) 이 외에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과 각각 한번, 두 번 군사충돌을 벌였다. 러시아는 1967년에 한국에 공격을 가했고 중국은 1966년, 1976년에 한국을 공격하였다.

117)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남북 직통전화.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dicaryId=148 (검색일: 2021.11.20.)

118) Oberdorfer and Robert. 2013. pp.55-61, 74-83

119) 이상현, and 조윤영. 2004. p169.

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안정화되는 추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철수는 한국 안보상황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1948-49년 주한미군 철수와 비교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큰 변수일 수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은 한국 방위에 협력할 것이다. 또한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은 상당한 군사지원과 경제원조를 약속하였고 1971년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한 후 한미 간 첫 안보협의가 열렸다. 이 협의는 나중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되었다. 이와 같은 양자안보협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지속되고 한미방위동맹관계가 증진되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일부분 철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효과를 크게 약화시키지 않았고 한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

## 제 3 절 핵무기 철수와 한국 안보상황의 변화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1958년에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였다.[120]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Neither Confirm Nor Deny)을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였다.[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굳건하였고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핵무기가 갖는 정치적 역할과 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유럽 여러 국가들의 변혁이 마침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로 이어졌으며 냉전의 종식이 공식화되었다. 1990년 말에 냉전의 종식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이 완연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을 구상하

120) 이규원, 2011. "이승만 정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11), pp. 250-251.

121) Peter Hayes. 1991.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 in Korea, Mess.: Lexington Books, 1991. pp90-91.

기 시작하였다. 1991년 9월 28일 부시 대통령은 공군용을 제외한 미국의 지상 단거리 핵무기 및 전술 핵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철거.파기하고, 전략핵의 현대화계획도 제한한다는 핵정책을 발표하였다.[122] 소련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 시대에 미국이 다루어야 하는 핵확산의 주체와 경로 등이 다원화되고 고차원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위협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전술 핵무기 폐기선언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전면 철수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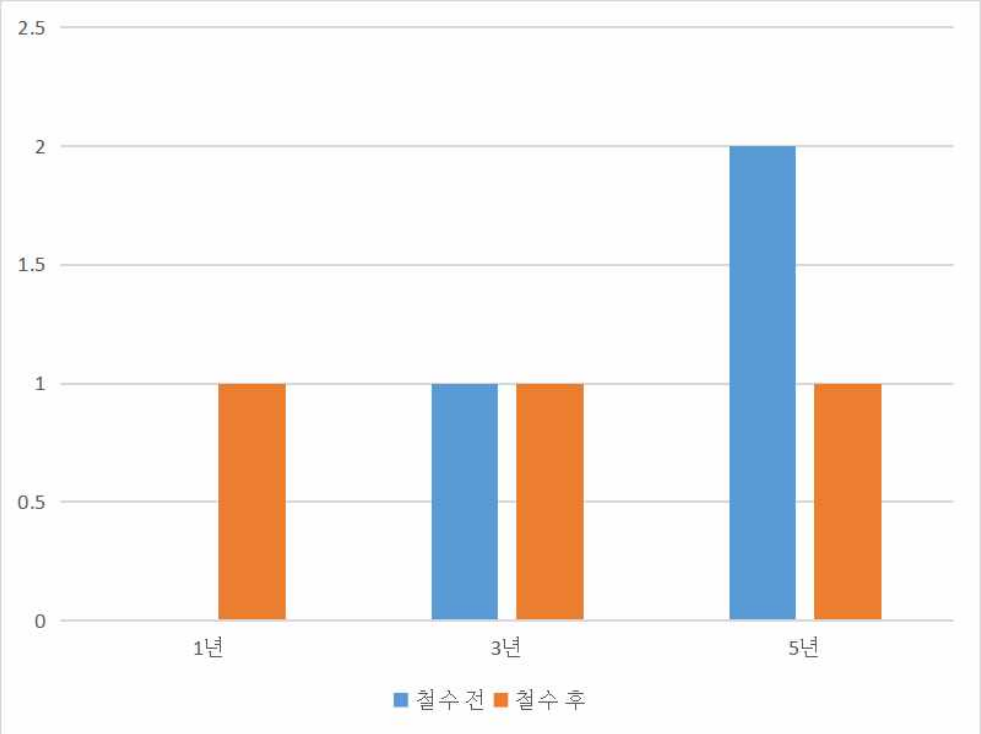
이와 같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다시 시작하였다. 1989년까지고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 주둔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판단에서 출발하여 199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대외안보 전략에서 가장 큰 외생변수가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적 혹은 지역적 전략상 필요, 혹은 전쟁의 방법이나 기술적 가능성에 따른 새로운 편성으로 볼 수 있다.[123]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와 더불어 주한미군 감축은 전에 비하여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행위의 경우 주한미군이나 핵무기의 철수에 따라 고조되지 않았다. 1980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은 김정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1983년부터 다시 도발을 감행하였다.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국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124] <그림 V-4>는 이 시기 한국이 당한 군사공격의 빈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

122) 문영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사상사*, (서울 : 을지서적, 1999), p. 439.
123) 이상현, and 조윤영. 2004. p182-187.
124) 정경두, & Jung Kyung-du. 2018. 탈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내 전술 핵무기 철수 결정 연구. 군사논단, 93, 102. p117.

<그림 V-4> 1986-1996년간 한국 군사충돌 발생 빈도




出處: Palmer, Glenn, Roseanne W. McManus, Vito D'Orazio, Michael R. Kenwick, Mikaela Karstens, Chase Bloch, Nick Dietrich, Kayla Kahn, Kellan Ritter, Michael J. Soules. 2020. "The MID5 Dataset, 2011-2014: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Working paper. Available at https://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mid-5-data-and-supporting-materials.zip/view.(검색일: 2021.12.10)

<그림 V-4>에 보여주듯이 핵무기를 철수하기 전에 비해 철수한 후 한국이 군사충돌을 겪은 빈도가 큰 변화가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록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철수하였으나 한국의 안보상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한미 방위동맹의 공고화 때문일 수 있다. 미국 딕 체니 국방장관이 1991년 11월 22일에 동경을 방문하여 미국의 아시아지역 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쌍무 안보협약 체제를 유지한다고 강조하였다.[125] 이와 같은 한미 방위동맹의 공고화가 한국이 군사충돌의

125) U.S. DoD. 1992a. A Strategic Frameword for the Asia Pacific Rim: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능을 한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 주목하여 주한미군 감축과 핵무기 철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한미군 1차 철수는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반면 주한미군 3차 철수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미군의 철수에 따른 확장억제 효과의 약화는 한미상호방위동맹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미 양국이 방위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위기 시 한국의 방위에 협력할 미국의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장억제 효과를 높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1991년 미국은 냉전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핵확산과 통제력의 약화를 우려하였고, 급격한 핵 군축을 추진하였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을 통해 한반도내 전술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이 아니라 핵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상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국제 안보 환경의 개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으나 한미방위동맹은 여전히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G.P.O. 6/22-7/22

#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에 따라 피후견국의 안보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동맹조약, 핵무기, 주둔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를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항 로짓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와 피후견국의 안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정량적 연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석적 방법인 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확장억제 자산의 변화와 피후견국의 안보를 연결시켜 바라보는 선행 연구들은 이론적 연구에 주목하거나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때문에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관한 결론의 일반화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로 인한 피후견국의 안보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초점을 맞추어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표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1)동맹조약이 종료된다면 과거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피후견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된다면,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피후견국에 확장억제 자산이 배치되어 있는지, 신규로 배치되었는지, 철수했는지와 같은 세 가지 범주로 설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피후견국과 잠재적 공격국의 양자적 특성, 그리고 국제 체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다항 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공수동맹이 있을 경우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하거나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다. 이는 일반 확장억제에 있어 공수동맹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동맹국과의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이 종료된다면 피후견국은 군사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피후견국의 안보에 있어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바이다. 둘째, 피후견국에 배치한 핵무기가 철수했을 때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진다. 한편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핵무기 철수는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힘들다. 셋째, 피후견국에 주둔한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군사충돌 발생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미군 감축은 피후견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후견국 측 군사력과 위기 시 피후견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의지가 미군 감축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어 본 연구는 한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확장억제 자산이 한국의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상호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사례가 총 6차례 있는데 1948-49년 미군 철수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군이 감축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또한 1991년에 미국이 한국에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후에도 한국의 안보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이는 한미방위동맹이 효과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앞서 설정한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을 확인하고 정량적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확장억제 자산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유형의 확장억제 자산의 철수가 피후견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의 유형별로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핵무기의 철수가 피후견국이 군사공격을 당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선행 연구와 연결해서 보면 핵무기의 배치나 철수는 확장억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피후견국은 핵보유국과의 방위동맹

으로 효과적인 확장억제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실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해외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되는 조건이나 영향을 가늠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핵무기의 해외 배치나 철수가 왜 해당 국가의 안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피후견국의 안보에 있어 동맹조약의 효과를 따로 분석하면서 동맹 효과 연구의 논의를 심화하였다. 방위동맹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 연구를 하는 선행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도 국가 간의 군사충돌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조약의 종료는 피후견국이 군사충돌에 휘말리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혀졌다. 국가 안보에 있어 중립 조약, 불가침 조약 혹은 협상조약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함의에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다섯 가지 동맹조약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의 동맹조약이 피후견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주한미군 철수한 후 무엇이 북한의 도발 행위나 공격적 행위의 단초가 되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둔군의 경우 미군의 해외 주둔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다른 강대국, 예를 들어 소련의 해외 주군 상황의 경우 관련 자료의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연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미군에 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는지는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차 문헌

Letter, Nixon to Park, 7 July 1970, FRUS: Korea 1969-72.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Kennan)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Butterworth), September 24, 1947, FRUS 1947, Vol. VI

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Henry A Kissinger, Subject: Review Group Meeting on Korea, February 3, 1970, H-041, NPM.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obertson)," April 24, 1953, FRUS, 1952-1954, Volume XV, Korea, Part 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Elizabeth A. Brown of the Office of United Nations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August 1, 1953. FRUS, 1952-1954, XV, Korea, Part2.

NSC 8,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FRUS 1948, Vol. VI: The Far East and Australia.

Report,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 the United Nations, NSC Senior Review Group Meetings, H-035, NSC Institutional Files,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NPL).

US Congress. 1978.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Department of Defense. 1992a. A Strategic Frameword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G.P.O.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Joint Publication 1-02 (Washington, DC: DoD, 2011)
US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Joint Publication 1-02 (Washington, DC: DoD , 2011) ,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for Atomic Energy. 1978. "History of the Custody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July 1945 through September 1977." Partially declassified and released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US Department of State. 200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19, Part 1: Korea, 1969-197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Nixon, 1969 (Washington: 1971).
US Government, US Military, Department of Defence, US Navy and National Security Agency, 2015. A Dangerous Business: The U.S. Navy and National Reconnaissance during the Cold War (Washington: Progressive Management 2015)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66-68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31 October 1978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 2차 문헌

단행본:

Art, Robert J. 2013. *A Grand Strategy for America / Robert J. Art*. 2013. Cornell Studies in Security Affairs. Web.

Bernard Burrows, 1972. *The Security of Western Europe* (London, 1972)

Bracken, Paul J. 1983. *The Command and Control of Nuclear Forces / Paul Bracken*. Print.

Bueno de Mesquita, Bruce and David Lalman. 1992. *War and Rea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 Taylor & Francis.

Chay, J. 1990. *Diplomacy of Asymmetry: Korean American Relations to 191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Dueck, Colin. 2015. *The Obama Doctrine : American Grand Strategy Today / Colin Dueck*. New York,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Web.

Freedman, Lawrence. 2003.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3r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George, Smoke, and Smoke, Richard. 1974.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 Theory and Practice / by Alexander L. George and Richard Smoke*. Print.

Hayes, Peter. 1991.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 in Korea,* Mess.: Lexington Books, 1991.

Hedley Bull,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Howard, Michael. 1984. *The Causes of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Iriye, Nagai, Iriye, Akira, & Nagai, Yōnosuke. 1977.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 Ed. by Yonosuke Nagai, Akira Iriye.*

Jervis, Robert. 1984. *The Illogic of American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Joo-hong Nam, *America'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 First Decade of the Nixon Doctr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Kim Jung-Ik. 1996.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Military Relationship*. London: Macmillan.
Oberdorfer, Don, and Robert Carlin. 2013.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Patrick Morgan, 1983.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New York: SAGE Publications,1983)
Posen, Barry. 2014.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Snyder, Glenn H. 1961.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omas Shelling. 1996.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6.
Vine, David. 2015. *Base Nation : How U.S. Military Bases Abroad Harm America and the World*. New York : Metropolitan Books, Henry Holt and Company.
Walt, Stephen M. 2006. *Taming American Power: The Global Response to U.S. Primac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연구 논문:

이규원. 2011. "이승만 정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11)
이상현, and 조윤영. 2004.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80년대 말 철군 논의와 한반도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 167-96. Web.
유인석. 2006.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

축 = Nixon Administration's Troop Withdrawal Policy from South Korea : The Role of Stabilizer and Partial Reduction / 유인석.

조동준. 2017. "북한의 핵능력 증가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주는 함의와 대처방안." 한국국가전략 2(1): 253-306.

조윤영, 이상현. 2004.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 80년대 말 철군 논의와 한반도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 167-96. Web.

Allen, Michael, VanDusky-Allen, Julie and Flynn, Michael. 2014. The Localized and Spatial Effects of US Troop Deployments on Host-State Defense Spending. Foreign Policy Analysis, 12, 674-694.

Anderson, J., Larsen, J., and Holdorf, P.M. 2013. Extended Deterrence and Allied Assurance: Key Concepts and Current Challenges for U.S. Policy.

Avey, Paul C, Markowitz, Jonathan N and Reardon, Robert J. 2018. Do US Troop Withdrawals Cause Instability? Evidence from Two Exogenous Shock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Volume 3, Issue 1, January 2018, Pages 72-92.

Bennett, D. Scott, and Allan Stam. 2000. Research design and estimator choices in the analysis of interstate dyads: When decisions matt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 (5): 653-85.

Bleek, Philip C., and Eric B. Lorber. 2014. "Security Guarantees and Allied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8(3):429-454.

Bremer, Stuart. 1992. Dangerous dyads: Condition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interstate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 (2): 309-41.

Brooks, S., Ikenberry, G., and Wohlforth, W. 2012.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Quarterly Journal: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3. (Winter

2012/13): 7-51.
Carter, David, and Curtis S. Signorino. 2010. "Back to the Future: Modeling Time Dependence in Binary Data." Political Analysis 18(3): 271-92
Choi, Young-Hi. 1978. "US Troop Withdrawal from Korea." Asian Affairs 5(3):189-191.
Cooley, Jason. 2019. "Do Political or Security Conditions Determine When American Security Transfers Are Made?" Journal of Strategic Security 13(2): 78-93.
Dafoe, A., Oneal, J. R., & Russett, B. 2013. The Democratic Peace: Weighing the Evidence and Cautious Inference The Democratic Peace: Weighing the Evidence and Cautious Infer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1), 201-214.
Danilovic, Vesna. 2001a. "The Sources of Threat Credibility in Extended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3): 341-69.
_____ 2001b. Conceptual and Selection Bias Issues in Deterrenc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1), 97-125.
Downes, Alexander B., and Sechser, Todd S. 2012. "The Illusion of Democratic Credi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66(3):457-89.
Drezner, Daniel W. 2013. Military Primary Doesn't Pay (Nearly as Much as You Think). International Security 38 (1): 52-79.
Eckstein, Harry. 1975.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7: Strategies of Inquiry. Reading: Addison-Wesley Press.
Elman, Miriam Fendius. 1997, "The Need for a Qualitative Test of the Democratic Peace Theory," in Paths to Peace: Is Democracy the Answer?, ed. Miriam Fendius Elma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7)
Fischer, Hannah. 2007. North Korean Provocative Actions, 1950-2007.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lournoy, Michele and Davidson, Janine. 2012. "Obama's New Global Posture." Foreign Affairs 91(4):54-63.

Fuhrmann, Matthew and Sechser, Todd S. 2014.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919-935.

Gartzke, Erik, and McMahon, Blake R. 2014. "Losing Streak: Evaluating the Recurrence of International Conflicts." Paper presented at the The 72nd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Geller, Daniel S. 1990. "Nuclear Weapons, Deterrence, and Crisis Escal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4(2): 291-310.

Gholz, Eugene, Daryl G. Press, and Harvey M. Sapolsky. 1997. "Come Home,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21(4):5-48.

Gibler, D., and Sarkees, M. 2004. Measuring Alliances: The Correlates of War Formal Interstate Alliance Dataset, 1816-2000. Journal of Peace Research, 41(2), 211-222.

Harkavy, Robert E. 2007. Strategic Basing and the Great Powers, 1200-2000. Florence: Routledge, 2007. Strategy and History.

Huntington, Samuel P. 1983. "Conventional Deterrence and Conventional Retali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8, No. 3 (Winter 1983-1984), pp. 32-56.

Huth, Paul and Russett, Bruce. 1988. Deterrence Failure and Crisis Escal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1), 29-45.

Huth, Paul K. 1988. Extended Deterrence and the Outbreak of Wa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Jun., 1988, Vol. 82, No. 2 (Jun., 1988), pp. 423-443.

_____.. 1990. The Extended Deterrent Value of Nuclear Weapon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4(2), 270-290.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 no. 2 (January 1978): 167-214.

Joakim Erma Møller. 2019. Trilateral defence cooperation in the

North: an assessment of interoperability between Norway, Sweden and Finland. Defence Studies 19:3, pages 235-256.

John J. Mearsheimer, 1984.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3, pp.19~46.

JONES, GARETT, AND TIM KANE. 2012. US Troop Deployments and Foreign Economic Growth. *Defence and Peace Economics* 23 (3): 225-249.

Kane, Tim. 2012. "Development and US Troop Deployments." Foreign Policy Analysis 8(3): 255-273.

Kimball, Anessa L. 2006. Alliance formation and conflict initiation: The missing link. Journal of Peace Research 43 (4): 371-89.

Kim, Claudia J. 2018. Bases That Leave: Consequences of US Base Closures and Realignm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8:2, pages 339-357.

Kristol, Irving. 1983. "What's Wrong With NATO?,"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25, 1983, pp. 64-71.

Lanoszka, Alexander and Hunzeker, Michael. 2016. “Land Power and American Credibility,” Parameters 45, no. 4 (Winter 2015 -2016): 17-26.

Leeds, B. 2003. Do Alliances Deter Aggression? The Influence of Military Alliances on the Initiation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3), 427-439.

Leeds, Brett Ashley, Jeffrey M. Ritter,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Andrew G. Long. 2002.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28: 237-260.

Leeds, Brett Ashlev. 2020,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ATOP) Codebook(Version 5.0 December 3, 2020)

Leeds, B., Mattes, M., & Vogel, J. 2009. Interests, Institutions, and the Reliability of International Commit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461-476.

MacDonald, Paul K. and Joseph M. Parent. 2011. Graceful Decline? The Surprising Success of Great Power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35(4):7-44.
Machain, Carla Martinez, and T. Clifton Morgan. 2013. "The Effect of US Troop Deployment on Host States' Foreign Policy." Armed Forces & Society 39(1): 102-23.
Maoz, Zeev, and Bruce Russett. 1993.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624-638.
Maoz, Zeev, Nasrin Abdoladi. 1989. "Regime Typ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1816-197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3(1): 3-35.
Mearsheimer, John J. 1984. "Nuclear Weapons and Deterrence in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9(3): 19-46.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16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Foreign Affairs 95(6):164-171.
Morgan, T. Clifton, and Glenn Palmer. "A Two-good Theory of Foreign Policy: An Application to Dispute Initiation and Reciproc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22.3 (1997): 225-44.
Morrow, James D. 2000. "Alliances: Why Write Them Dow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63-83.
Palmer, Glenn, Roseanne W. McManus, Vito D'Orazio, Michael R. Kenwick, Mikaela Karstens, Chase Bloch, Nick Dietrich, Kayla Kahn, Kellan Ritter, Michael J. Soules. 2020. "The MID5 Dataset, 2011-2014: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Working paper.
Paul, T. V., 1995. "Nuclear Taboo and War Initiation in Regional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9/4, 1995.
Posen, Barry R. 2003. Command of the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28(1), 5-46.
_____. 2014.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1989.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1989)
Rose, Gideon. 1998.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51(1):144-72.
Singer, J. David, 1987.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4 (1987), pp. 115-32
Singer, J. David,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pp. 19-48.
Solomon William Polachek,"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 No.1, (Mar. 1980)
Siverson, R. M., & King, J. (1980). Attributes of National Alliance Membership and War Participation, 1815-1965.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1), 1-15.
Smith, A. 1996. To Intervene or Not to Intervene: A Biased Decis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0(1), 16-40.
TAYLOR, W. J., SMITH, J. A., & MAZARR, M. J. 1990. US TROOP REDUCTIONS FROM KOREA, 1970-1990.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4(2), 256-286.
Weede, E. 1983. Extended Deterrence by Superpower Allianc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2), 231-254
Wirtz, James J. 2018. "How Does Nuclear Deterrence Differ from Conventional Deterrenc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 SSQ 12.4 (2018): 58-75.

인터넷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남북 직통전화.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dicaryId=148
통일부, 주요사업. 남북교류협력.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status/overview/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Data. http://atop.rice.edu/dat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69a. "NIE 42-69: The Outlook in South Korea."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DOC_0001218151.pdf.

-----. 1969b. "SNIE 14.2-69: The Confrontation in Korea." http://www.foia.cia.gov/sites/default/files/document_conversions/89801/DOC_0001218149.pdf.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 version 5.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

Center for Systemic Peace, Polity5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8, https://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Fuhrmann and Sechser, 2014b; Foreign Nuclear Deployment Dataset. http://www.matthewfuhrmann.com/datasets.html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North Korean Shootdown of a U.S. Reconnaissance Flight and Contingency Planning, January-November 1969.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d1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the EC-121 Shootdown. National Security Agency. https://www.nsa.gov/portals/75/documents/news-features/declassified-documents/cryptologic-histories/EC-121.pdf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kor001.asp.

Tim Kane, Ph.D., Troop Deployment Dataset, 1950-2005, The Heritage Foundation, Center for Data Analysis, current as of March 1, 2005, at http://www.heritage.org/Research/NationalSecurity/troopsdb.cfm.

Voeten, Erik; Strezhnev, Anton; Bailey, Michael, 2009,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Voting Data", https://doi.org/10.7910/DVN/LEJUQZ

# 부록

<표 III-2> 1950-2000년간 해외 주둔 미군 상황

| ccode | stabb | types of U.S. military deployments | notes |
|---|---|---|---|
| 365 | Soviet Union | military officer | There've been dozens of us troops in Soviet Union, and afterwards Russia, all the time and the number reached above 100 in 2000. |
| 660 | Lebanon | liaison officer (remaining period); civil issues(1958); peacekeeping operation(1982-84) | During the 1958 Lebanon crisis , U.S. troops intenvened to help protect against threatened insurrection supported from the outside and to facilitate the restoration of Lebanese government sovereignty. With the crisis over, the United States withdrew. In 1982, Israel Defense Forces launched a invasion of southern Lebanon. At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to assist, the 32d Marine Amphibious Unit of the U.S., together with French and Italian military units as part of a peacekeeping force landed in Lebanon to supervise the evacuation of the PLO. The U.S. forces withdrawed in 1984. |
| 670 | Saudi Arabia | forward deployment (1950-1989); extended deterrence (1990-2000) | OnJune16,1951,SaudiArabiaand theUnitedStatesconcludedaMutualDefenseAssistanceAgreement(MDA)undertheprovisionsoftheMutualDefenseActof1949toestablishatrainingmissiontoassistandadvisetheSaudiArabianMinisterofDefenseandAviation.AftertheIraqiarmyinvadedKuwaiton2August1990, the U.S. |

| | | | |
|---|---|---|---|
| | | | government ordered the deployment of troops and equipment to defend Saudi Arabia. Since then, the US has had a continued presence of 5,000 troops stationed in Saudi Arabia |
| 651 | Egypt | liaison officer (1950-1955; 1967-1979); peacekeeping operation (1956-1967); military exercise (1980-2000) | During the 1956 Suez Crisis, the Israeli Defense Forces invaded Egypt and were soon followed by French and British forces. In response, the US, with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at the UN intervened on behalf of Egypt to force a withdrawal. To lessen the chance of future hostilities, the UN deployed an Emergency Force (UNEF) in the region. After the Camp David Accords were signed. the military forces of Egypt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conduct coalition training in Egypt. |
| 310 | Hungary | liaison officer (1950-1995); extended deterrence (1996-2000) | At the end of the World War II, Soviet forces entered Hungary and over the course of several years installed a communist regime that remained in place for over four decade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1989, the United States provided assistance and expertise to support Hungary in its transition to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From December 1995, The United States used Taszár Air Base, located in Hungary, as the primary staging post for U.S. peacekeeping forces coming and going into the Balkans. In 1999, Hungary acceded to NATO. |
| 600 | Morocco | forward deployment | In 1951, the U.S.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French to |

| | | | |
|---|---|---|---|
| | | | establish four U.S. Strategic Air Command bases in Morocco. With the independence of Morocco, the U.S. signed an agreement with it in 1959 which led to the evacuation of the four bases in the early sixties and several smaller communications sites in the late seventies. |
| 616 | Tunisia | forward deployment |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unisia and the USA goes back to 1958. In 1981, a Joint Military Commission was established. It meets annually at the ministerial level to discuss military cooperation, Tunisia's defense modernization program, and other security matters. |
| 620 | Libya | forward deployment (1951-1969) | TheUnitedStateshadamilitaryb ase,namedWheelusAirBase, located in British-occupied Libya and the Kingdom of Libya from 1943 to 1970. Roughly 5,000 American troops were in Libya per year during the 1950s and 1960s. |
| 698 | Oman | forward deployment | Oman has hosted U.S. operations since 1980 and has assisted the U.S. in combating ISIS. |
| 520 | Somalia | peacekeeping operation | Following the eruption and escalation of the civil war in Somalia in 1991,the United States led the UN-sanctioned multinational Unified Task Force(UNITAF) to provide, facilitate, and secure humanitarian relief there. |
| 690 | Kuwait | forward deployment (1961-1990); extended deterrence (1991-2000) | From 1970s, The United States uses bases in Kuwait as staging hubs, training ranges and logistical support for regional |

| | | | |
|---|---|---|---|
| | | | operations. In 1991, U.S. military forces led a multinational coalition to expel the forces of the former Iraqi regime from Kuwait. Since the Persian Gulf War, U.S. and Kuwait have had a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
| 696 | United Arab Emirates | forward deployment (1971-1997); extended deterrence (1998-2000) |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ree military bas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from 1980s. The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the U.A.E. blossomed during the First Gulf War in 1990. Following the cessation of combat, the U.S. military maintained a presence in the U.A.E., which hosted the U.S. 763rd Expeditionary Air Refueling Squadron in its mission to enforce the no-fly zone over southern Iraq. In 1994, the UAE and the U.S. signed a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DCA) to develop joint approaches to regional conflicts and to promote U.S.-UAE interoperability. |
| 692 | Bahrain | forward deployment (1971-1989); extended deterrence (1990-2000) | the U.S. has maintained a military presence in Bahrain since 1948. Bahrain hosts a U.S. Naval base (Naval Support Activity Bahrain), maintain Persian Gulf security in Bahrain. In response to Iraq's invasion and annexation of Kuwait, a coalition of forces, including Bahrain, led by the United states waged the Gulf War. More than 1,000 U.S. forces remained in Bahrain in the 1990s to help contain Iraq. |
| 630 | Iran | extended deterrence |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Soviet Union |

| | | | |
|---|---|---|---|
| | | (1950-1978) | refusing to relinquish occupied Iranian territory caused the Iran crisis of 1946. The United States exerted intense pressure on the Soviet Union to force the withdrawal of the Red Army from Iran and reduce Soviet influence. The actions by U.S. government laid the foundations of U.S. relations with Iran. Meanwhile Soviet geopolitical expansion led to the Truman Doctrine of the Cold War. Taking Truman's cue, successive U.S. presidents enlarged and refined their policies toward Iran by strengthening its military potential and integrating Iran into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encompassing the other countries of the 'Northern Tier' of the Middle East and the Persian Gulf. |
| 920 | New Zealand | forward deployment |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signed the ANZUS Treaty in 1951, which is a collective security non-binding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eparately,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to co-operate on military matters in the Pacific Ocean region. In 1984, the ANZUS treaty began to unravel when New Zealand refused to allow American nuclear-powered submarines into New Zealand ports. On September 17, 1986, the United States suspended its treaty obligations toward New Zealand. |
| 900 | Austral ia | forward deployment |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signed the |

| | | | |
|---|---|---|---|
| | | | ANZUS Treaty in 1951, which is a collective security non-binding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eparately,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to co-operate on military matters in the Pacific Ocean region. Meanwhile, the U.S. hold two military bases in Australia, one for surveillance and one for navy. |
| 530 | Ethiopia | forward deployment | Under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greement in 1953,U.S. military assistance to Ethiopia and an accord regularizing the operations of a U.S. communication facility at Asmara, Kagnew Station were formalized. |
| 345 | Yugoslavia | peacekeeping operation | From 1991 to 2001, a series of separate but related ethnic conflicts, wars of independence, and insurgencies fought in the former Yugoslavia. In 1999, NATO decided that the conflict could only be settled by introducing a military peacekeeping force to forcibly restrain the two sides. NATO carried out an aeria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the Kosovo Force(KFOR), a NATO-led international peacekeeping force, followed.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 non-binding resolution on March 11, 1999, approving of President Clinton's plan to commit 4,000 troops to the NATO peacekeeping mission. |
| 666 | Israel | liaison officer | Under rapidly changing geopolitical circumstances, |

| | | | |
|---|---|---|---|
| | | | US policy in the Middle East was generally geared toward maintaining a neutral stance in the Arab-Israeli conflict. In 1991, in an urgent effort to keep Israel from plunging into the Persian Gulf War, the United States dispatched American soldiers and two Patriot missile batteries to Israel to stand guard against any new Iraqi missile attacks. It also marked the first time that U.S. combat troops have been assigned to duty in Israel. |
| 205 | Ireland | civil issues | There were more than 3000 us troops in Ireland in 1954 and dozens at other times(no U.S. military bases there). In 1954, Costello regains the presidency. The Flags and Emblems Act suppresses the display of the Irish flag in Northern Ireland. There is renewed IRA activity in Armagh. |
| 560 | South Africa | military assistance | There were more than 200 us troops in South Africa in 1957 and dozens at other times. In 1957, South Africa signed a 50-year nuclear collaboratio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at resulted in South Africa's acquisition of a nuclear reactor and an accompanying supply of highly enriched uranium (HEU) fuel. |
| 380 | Sweden | liaison officer | During the Cold War, the Sweden, being a neutral state, secretly made preparations to receive military aid from the United States in case of Soviet aggression. |
| 770 | Pakistan | extended deterrence | In 1953, Pakistan signed Mutual Defense Assistance |

| | | | |
|---|---|---|---|
| | | (1953-1971); liaison officer (remaining period) |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reement, many Pakistani soldiers went to United States for training whereas US also established a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 (Maag) in Rawalpindi. During 1971's war, US is speculated to have provided Pakistan with arms and military aid, in order to discourage India from penetrating further into the cities of Pakistan.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in December 1979 highlighted the common interest of Pakistan and the United States in opposing the Soviet Union. In 1981, Pakist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on a $3.2 billion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program aimed at helping Pakistan deal with the heightened threat to security in the region. From 1990, US imposed sanctions on Pakistan, cutting all military funds and most economic assistance. |
| 750 | India | extended deterrence (1963-1968); liaison officer (remaining period) | During the cold war, American officials perceived India's policy of non-alignment negatively. With the Sino-Indian War occured in 1962, the Kennedy administration was disturbed by what they considered "blatant Chinese communist aggression against India". In a May 1963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contingency planning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vent of another Chinese attack on India was discussed and nuclear |

| | | | |
|---|---|---|---|
| | | | options were considered. |
| 812 | Laos | extended deterrence (1955-1968); civil issues (remaining period) | During the Laotian Civil War of 1953－1975, the US became heavily involved, in a secret covert war, backing the Royal Lao government and the Kingdom of Laos, and Hmong people against the Pathet Lao and the invading PAVN (Vietnam People's Army) forces. |
| 305 | Austria | Allied occupation of Austria |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World War II, Austria was divided into four occupation zones and jointly occupied by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And from 25 October 1955 the country was free of occupying troops. |
| 41 | Haiti | civil issues | Beginning on September 12, 1955, The U.S. government agreed to provide military assistance to the Haiti government to deal with civil violence.<br>After a military coup under the leadership of Lieutenant General Raoul Cedras overthrowing the government of Jean-Bertrand Aristide, the first popularly elected president in Haitian history, U.S. president Clinton launched a U.S.-led military mission to restore a democratic government to Haiti. |
| 344 | Croatia | peacekeeping operation | Tensions between Crosts and Serbs escalated into overt war when the Yugoslav People's Army and various Serb paramilitary groups attacked Croatia in 1991. UN responded with a success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th peacekeeping forces, sent to |

| | | | |
|---|---|---|---|
| | | | Croatia. |
| 52 | Trinidad and Tobago | civil issues | There were more than 200 ustroops in Trinidad and Tobago from 1963 to 1966 and over 100 in 1995. At other times the number was mostly 0. In December 1963, six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f National Liberation(FALN), a terrorist group in Venezuela, high jacked an aircraft from Cuidad Bolivarto Piarco, Trinidad. As a result, starting 10 December, a detachment of the TTDF took up duties at Piarco Airport and a tactical guard was mounted at the Prime Minister's residence by night and his office by day. |
| 40 | Cuba | forward deployment | The U.S. has a military base located in Cuba, named Guantanamo Bay naval base. |
| 346 | Bosnia and Herzego vina | peacekeeping operation | Following Bosnia and Herzegovina'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Bosnian Serbs, led by Radovan Karadžić and supported by the Serbian government of Slobodan Milošević and the Yugoslav People's Army (JNA), mobilised their forces inside Bosnia and Herzegovina in order to secure ethnic Serb territory, then war soon spread across the country. From 1996, the NATO Implementation Force consisting of 60,000 military personnel, one-third of them American, went to Bosnia and Herzegovina to enforce the peace and to facilitate the reconstruction of the country. |

| | | | |
|---|---|---|---|
| 830 | Singapore | forward deployment | As part of a 1990 agreement (concluded in 1992) between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military forces (primarily naval and air force) have been making use of Sembawang's base facilities. |
| 53 | Barbados | forward deployment | U.S. had a naval base in Barbados named Naval Facility(NAVFAC) Barbados. |
| 31 | Bahamas | forward deployment | U.S. has a naval base in Bahamas named AUTEC which provides instrumented operational areas in a real world environment to satisfy 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of war fighter readiness in support of the full spectrum of maritime warfare. |
| 55 | Grenada | civil issues | In 1983 U.S. launched a military intervation in Grenada as a response to the confrontation there. |
| 352 | Cyprus | peacekeeping operation | After the Cyprus's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differences immediately arose between the majority Greek Cypriot and minority Turkish Cypriot communities. Subsequently, the inter-communal violence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in 1964 to prevent a recurrence of fighting. |
| 115 | Suriname | civil issues | Since the re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elected government in 1991, the U.S. has provided training regarding appropriate roles for the military in civil society to some of Suriname's |

| | | | |
|---|---|---|---|
| | | | military officers and decision makers to further strengthen civil society and bolster democratic institutions. |
| 343 | Macedonia | peacekeeping operation | The Security Council authorized the establishment of UNPROFOR's presence i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by its resolution 795(1992) of 11 December 1992 as "UNPROFOR's Macedonia Command". And on 18 June 1993, the Council welcomed the offer by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bout 300 troops to reinforce UNPROFOR's presence in the republic and, in its resolution 842(1993), authorized the deployment of the additional personnel. |
| 230 | Spain | forward deployment | According to the Pact of Madrid, signed on 23 September 1953 by Francoist Spain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s to be permitted to construct and to utilize air and naval bases on Spanish territory (Naval Station Rota, Morón Air Base, Torrejón Air Base and Zaragoza Air Base). |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check how the withdrawal of extended deterrence assets affects the security of the protege state through statistical methods and case studies. Since the Cold War, great power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regard the security of their allies as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nd try to deter the threat or attack of hostile forces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deploying nuclear weapons, stationing troops, and forming alliances. Today, 30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has improved significantly, an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great powers are showing a tendency to reduce their reach all over the world. The key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oes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deteriorate when the patron state withdraws its extended deterrence assets from the protege state?" More specifically, "Does the withdrawal of extended deterrence assets weaken the effect of extended deterrence, therefore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a military attack on the protege state?"

This study selects extended deterrence assets into three types: alliance treaties, nuclear weapons, and garrisoned forces (US forces), and argues that the withdrawal of different extended deterrence assets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hree hypotheses are derived from this argument. (1) If the alliance treaty is terminated,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is highly likely to deteriorate. (2) If the nuclear weapons deployed in the protege state are withdraw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is likely to deteriorate. (3) If U.S. forces stationed in the protege state are withdraw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is likely to deteriorate.

This study shows the effect of the withdrawal of extended deterrence assets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hrough statistical methods using extended deterrence assets data and military conflict data, and case study regarding to the withdrawal of US assets from South Korea. Statistical analysis is consider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to verify the claims by the type of extended deterrence asset. Statistic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withdrawal of different extended deterrence assets has different impacts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he withdrawal of US troops and nuclear weapons do not necessarily worse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To supplement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South Korea case is analyz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U.S. assets withdrawal on South Korea's security situation. The results of case study support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The full withdrawal of U.S. troops in 1948-49 did resulted in the Korean War. However, after the sign of the ROK-U.S. defense allianc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or nuclear weapons did not lead to the worse of the security situation of South Korea. For example, in 1970, the United States withdrew 20000 U.S. military forces and moved the 2nd Infantry Division to the rear area, which greatly weakened the role of the U.S. forces as tripwire when North Korea attack. However, if we look at the frequency and hostilities of military attacks that South Korea faced, the security situation of South Korea has not deteriorated after the reduction of US for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extended deterrence and help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withdrawal of different kinds of extended deterrence assets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protege state. In addition, on a realistic level,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assessing the conditions for withdrawing extended deterrence assets while the global power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reduce their reach around the world.

Key words: extended deterrence, end of alliances, foreign nuclear withdrawals, US troops withdrawals, security situation of protege state
Student Number: 2018-24444